

ASAN REPORT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 2010~2020년 아산연례조사 결과

제임스 김, 강충구, 함건희

2021년 9월



Asan Report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
2010~2020년 아산연례조사 결과

제임스 김, 강충구, 함건희
2021년 9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 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 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저자

제임스 김

제임스 김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미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Columbia University 국제대학원 겸임 강사이다. Cornell University에서 노사관계 학사와 석사학위를 마치고 Columbia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의 조교수(2008~2012)와 랜드 연구소의 Summer 연구원(2003~2004)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연구 분야는 비교민주주의 제도, 무역, 방법론, 공공정책 등이다.

강충구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함건희

함건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정보수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통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응용통계연구소 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혼합모형, 불완전 자료 분석, 방법론 등이다.

목차

요약	06
1. 들어가며	10
2. 한반도 정세	15
2.1 북한	15
2.1.1 통일 인식	15
2.1.2 남북관계 인식	23
2.1.3 북한의 안보위협	30
2.1.4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34
2.2 한미동맹	38
2.2.1 한미동맹과 확장억지	38
2.2.2 한미동맹 이슈	40
2.2.3 한국인의 대미 인식	44
2.3 지역안보	45
2.4 글로벌 안보	48
3. 나가며	50
조사방법	52
부록 1	55
부록 2: 2010~2020년 남북관계 일지	56
부록 3: 2020년 아산연례조사 설문지	63

그림

[그림 1] 한국인의 통일 인식: 관심 및 필요성 평가	17
[그림 2] 통일의 경제효과: 부정 전망	19
[그림 3] 2002~2020년 유형별 남북대화	24
[그림 4] 시기별 한국인의 대북 인식	25
[그림 5] 시기별 한국인의 남북관계 인식	26
[그림 6] 한국인의 북한 비핵화 전망: 부정 전망	33
[그림 7] 2000~2020년 GDP 대비 국방비 지출	36
[그림 8] 향후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의견	41

표

[표 1] 통일세 부담 의향	21
[표 2] 통일세 부담 의향에 영향을 미친 요인	22
[표 3] 과거 1년 대비 경제상황 평가	23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남북관계 인식: 부정 인식	27
[표 5]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의견	29
[표 6] 한국인의 대북정책 인식	35
[표 7] 한국인의 핵무장에 대한 인식	37
[표 8] 한미동맹의 필요성: 향후 vs. 통일 후	40
[표 9] 주한미군의 필요성: 향후 vs. 통일 후	42
[표 1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견	43
[표 11] 한미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의견	44
[표 12] 한국인의 대미 인식	45
[표 13]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	46
[표 14] 우리나라에 미치는 주변국의 영향	48
[표 15]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 요인	49

요약

본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을 조사했다. 주변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전후로 여론 변화가 감지됐지만, 2010~2020년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은 안정적이었다. 주변국 인식만 보더라도 동맹 파트너인 미국에는 호의적,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는 적대적이었다. 북한에는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적대 시각이 늘었지만, 양가적 정서를 드러냈다. 북한을 한민족으로 보고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편, 최대 안보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조사의 주요 결과이다.

- 2020년, 한국인의 76.9%는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2011년 이래 70% 이상이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2017년: 82.3%, 2019년: 82.1%, 2020년: 76.9%). 통일 관심도는 2018년, 85.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최저치-2010년: 52.6%).
- 통일에 대한 관심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났다. 50대(80.5%), 60세 이상(78.5%) 고령층은 80% 내외가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한 반면, 젊은 층은 70% 초반만 동일한 답을 했다(40대: 76.6%, 30대: 73.5%, 20대: 73.3%). 이는 전쟁의 상흔과 이산 가족에 대한 정서적 거리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 통일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은 2011년 이래 70% 내외였다. 최고치를 기록한 해는 2015년으로 79.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2017년 70.8%, 2018년 66.2%, 2019년 64.7%, 2020년 64.4%로 연이어 하락했다.
- 통일의 경제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통일이 국가·가구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은 결과, 2010년(국가: 76.4%, 가구: 74.6%) 이래 다수가 통일 후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둘은 높은 상관관계에 있었다($r=0.936$). 2020년에도 60% 이상이 '통일 후'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봤다(국가: 62.8%, 가구: 63%). 통일세 추가 부담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2020년,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같은 문항으로 실시한 2011년(20.6%) 조사 대비, 24.9%p 상승한 결과였다.

- 통일 후 경제에 대한 부정 전망은 여성(국가: 66.3%, 가구: 67.5%), 60세 이상(국가: 65.8%, 가구: 69.1%)과 젊은 층(20대 국가: 65.9%, 가구: 69%, 30대 국가: 68.4%, 가구: 67.1%)에서 더 분명했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는 보수는 각각 77.3%, 75.9%가 국가, 개인의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좋아질 것-국가: 22.7%, 가구: 24.1%)으로 본 반면, 진보는 전망이 엇갈렸다(국가·가구-나빠질 것: 50.5%, 좋아질 것: 49.5%).
- 한국인의 대북(對北) 인식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다소 바뀌었다. 2011년 이래 북한을 우호적('우리' 또는 '이웃')으로 본 비율은 절반 내외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55.8%, 2018년 58.6%, 2019년 56.1%, 2020년 49%를 기록했다. 반대로 북한에 대한 적대('남' 또는 '적') 시각은 30% 내외였는데, 2020년 37.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2017년: 31.9%, 2018년: 30.5%, 2019년: 34%).
-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이념성향에 따라 달랐다. 2020년에도 보수는 소수인 28.5%만 북한을 우호적으로 본 반면(적대: 57.3%), 진보에서 이 시각은 66.6%로 절반을 넘었다(적대: 25.8%). 북한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할수록 북한에 적대 시각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 남북관계 인식도 2018년을 전후로 변화가 뚜렷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북미·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그러나 2019년 북미 비핵화 회담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한국인 사이 기대감은 실망감이 됐다. 본원 조사에서도 2018년, 63.4%는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부정: 36.6%)했으나 한반도 정세가 반전되면서 2019년, 2020년에는 남북관계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2019년: 73.9%, 2020년: 84.1%).
- 대북 경제지원에는 2011년 이래 70% 내외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지원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2017년: 78%, 2018년: 76.5%, 2019년: 72.3%, 2020년: 78.7%). 다수가 경제지원이 조건부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와 달리,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0% 내외였다(2017년: 22%, 2018년: 23.5%, 2019년: 27.7%, 2020년: 21.3%).
-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의견도 이념성향에 따라 달랐다. 2020년, 보수는 대다수인

91.9%가 조건부 지원을 지지한 반면, 진보는 63.7%만 그에 공감했다. 반대로 진보는 36.3%가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경제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고, 이에 동의한 보수는 8.4%에 불과했다.

- 남북 간 전쟁 가능성에는 57.3%(2020년)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답은 42.7%였다.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한 응답자는 39.7%가 미국의 개입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이유로 들었고, 36.4%는 전쟁을 치르기에 북한의 경제력이 취약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이들은 55.9%가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남북 간 전쟁 가능성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평가했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비율은 20대에서 54.9%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는 60세 이상이 44.5%였다. 다른 연령대는 40대 39.5%, 30대 38%, 50대 36.6% 순이었다. 30~50대가 전쟁 위협을 덜 느낀 이유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수차례 겪으면서 도발이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우리 군의 대북 억지에는 불신이 높았다. 72.3%가 우리 군이 단독으로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막을 수 있다: 27.7%). 단독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67%가 한국군이 단독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이길 수 있다: 33%). 이러한 한국인의 대북 억지 인식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2020년 한국인의 94.9%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93.3%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2020년, 69.3%는 독자 핵개발을 지지했다(반대: 30.7%). 2010년(찬성: 55.6%, 반대: 44.5%) 이래 절반 이상이 핵 개발을 지지했으나, 2019~2020년에는 각각 67.1%, 69.3%가 자체 핵무기 개발에 지지를 보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북핵 대응으로 핵무기 개발을 택한 비율이 더 늘었다.
-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2012년 이래 높게 지속됐다. 이는 '향후', '통일 후'로 나눠 한미동맹이 필요한지를 물은 결과였다. 향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대로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봤다(2017년: 95.6%, 2018년: 94.1%, 2019년: 91.9%,

2020년: 95.9%). 통일 후를 가정해 물었을 때, 80%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다수가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2017년: 80%, 2018년: 85.2%, 2019년: 80.4%, 2020년: 86.3%).

- 2014년부터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해야 하는지도 '향후', '통일 후'로 나눠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는 답은 2017년 80.6%, 2018년 76.3%, 2019년 74.7%, 2020년 72%로 다수였다. 통일 후를 가정해 물었을 때는 40% 내외가 주둔해야 한다고 답했다(2017년: 35.1%, 2018년: 49.5%, 2019년: 44.1%, 2020년: 46.3%).
- 한미동맹 이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해서도 물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조건 충족시에만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가 42.5%로 가장 많았다. '조건과 관계없이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야 한다'는 27.2%였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논란이 됐던 방위비분담금에는 41.1%가 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보다 인하여야 한다, 미국의 요구보다 낮게 인상해야 한다는 각각 23.4%, 23.1%였다.
-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는 북한(55.8%)을 꼽았다. 중국이라고 한 응답은 25.9%였다(미국: 6.1%, 러시아: 0.4%). 통일 후를 가정해 같은 문항에 답하게 했을 때, 중국이 안보위협이 될 것이란 응답은 66.7%나 됐다. 일본이 통일 후 안보위협이 될 것이란 비율은 23.1%였다(미국: 8.1%, 러시아: 1.5%).
- 주변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물었다. 2020년, 대부분은 일본(71.5%), 북한(68.9%), 중국(66.3%), 러시아(55.4%)가 우리나라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유일하게 미국에 대해서만 긍정 영향이 63.6%로 다수였다(부정: 17.6%).

1. 들어가며

국제 외교·안보 무대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중 간 강대국 경쟁뿐 아니라, 기존 동맹에도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16년 미(美) 대선 후 국제사회 내 미국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한 신뢰는 쇠퇴했고, 유럽·아시아의 전통 동맹국은 대미(對美) 의존도 조정을 위해 ‘헤징(hedging)전략’을 택했다.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 현상으로 국제정세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시점에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본원의 연례조사 자료를 이용해 대외정책, 안보에 대한 국내 여론동향을 분석했다.

기존 여론연구는 대중의 집단적 정책 선호가 합리적, 안정적이며 일관적이라는 점을 밝혀왔다.¹ 파급 효과가 큰 외교·안보 이슈로 여론이 일시적으로 출렁일 순 있지만, 장기간에 걸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은 안정적이었다. 동맹 파트너인 미국에는 호의적이었지만 주변국인 중국, 일본에는 적대적이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다소 복잡했는데, 북한이 같은 민족이면서 상존하는 안보위협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집단적 정책 선호에 변화가 포착된 경우는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다.² 정보 접근성에 따라 개별 정파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지만, 엘리트층 중심으로 형성된 정책 담론은 대체로 여론에 영향을 준다. 정보 접근성과 비용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정치 지도자의 언행도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 이념성향, 정보처리능력 등 개인 특성 역시, 여론 형성과 관련이 있었다.³

1. Benjamin I. Page & Robert Y. Shapiro. 1992. *The Rational Public: Fifty Years of Trends in Americans' Policy Preferenc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2. Philip Converse. 1962. "Information flow and stability of partisan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26: 578-99; William J. McGuire. 1969. "The nature of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In G. Lindzey and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nd Ed), Addison-Wesley: Reading, MA, 136-314; Matthew A. Baum and Philip B. K. Potter. 2019. "Media,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in the Age of Trump," *Journal of Politics*, 81(2): 747-56.

3. John R. Zaller.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본원에서 매년 실시한 연례조사는 한반도 정세 관련 이슈에 초점을 맞췄다. 통일, 남북관계, 북한에 대한 인식을 차례로 분석했고,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도 검토했다. 다음으로는 한미동맹 인식을 분석했는데, 관련 이슈인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 방위비분담금 협정 등에 대한 인식도 살펴봤다. 2020년에는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코로나 19,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의 비전통 안보 인식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20년, 한국인의 76.9%는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2011년 이래 70% 이상이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2017년: 82.3%, 2019년: 82.1%, 2020년: 76.9%). 통일 관심도는 2018년, 85.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최저치-2010년: 52.6%).
- 통일에 대한 관심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났다. 50대(80.5%), 60세 이상(78.5%) 고령층은 80% 내외가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한 반면, 젊은 층은 70% 초반만 동일한 답을 했다(40대: 76.6%, 30대: 73.5%, 20대: 73.3%). 이는 전쟁의 상흔과 이산가족에 대한 정서적 거리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 통일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은 2011년 이래 70% 내외였다. 최고치를 기록한 해는 2015년으로 79.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2017년 70.8%, 2018년 66.2%, 2019년 64.7%, 2020년 64.4%로 연이어 하락했다.
- 통일의 경제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통일이 국가·가구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은 결과, 2010년(국가: 76.4%, 가구: 74.6%) 이래 다수가 통일 후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둘은 높은 상관관계에 있었다($r=0.936$). 2020년에도 60% 이상이 '통일 후'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봤다(국가: 62.8%, 가구: 63%). 통일세 추가 부담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2020년,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같은 문항으로 실시한 2011년(20.6%) 조사 대비, 24.9%p 상승한 결과였다.
- 통일 후 경제에 대한 부정 전망은 여성(국가: 66.3%, 가구: 67.5%), 60세 이상

(국가: 65.8%, 가구: 69.1%)과 젊은 층(20대 국가: 65.9%, 가구: 69%, 30대 국가: 68.4%, 가구: 67.1%)에서 더 분명했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도 보수는 각각 77.3%, 75.9%가 국가, 개인의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좋아질 것-국가: 22.7%, 가구: 24.1%)으로 본 반면, 진보는 전망이 엇갈렸다(국가·가구-나빠질 것: 50.5%, 좋아질 것: 49.5%).

- 한국인의 대북(對北) 인식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다소 바뀌었다. 2011년 이래 북한을 우호적(‘우리’ 또는 ‘이웃’)으로 본 비율은 절반 내외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55.8%, 2018년 58.6%, 2019년 56.1%, 2020년 49%를 기록했다. 반대로 북한에 대한 적대(‘남’ 또는 ‘적’) 시각은 30% 내외였는데, 2020년 37.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2017년: 31.9%, 2018년: 30.5%, 2019년: 34%).
-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이념성향에 따라 달랐다. 2020년에도 보수는 소수인 28.5%만 북한을 우호적으로 본 반면(적대: 57.3%), 진보에서 이 시각은 66.6%로 절반을 넘었다(적대: 25.8%). 북한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할수록 북한에 적대 시각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 남북관계 인식도 2018년을 전후로 변화가 뚜렷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북미·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그러나 2019년 북미 비핵화 회담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한국인 사이 기대감은 실망감이 됐다. 본원 조사에서도 2018년, 63.4%는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부정: 36.6%)했으나 한반도 정세가 반전되면서 2019년, 2020년에는 남북관계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2019년: 73.9%, 2020년: 84.1%).
- 대북 경제지원에는 2011년 이래 70% 내외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지원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2017년: 78%, 2018년: 76.5%, 2019년: 72.3%, 2020년: 78.7%). 다수가 경제지원이 조건부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와 달리,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0% 내외였다(2017년: 22%, 2018년: 23.5%, 2019년: 27.7%, 2020년: 21.3%).
-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의견도 이념성향에 따라 달랐다. 2020년, 보수는 대다수인 91.9%가 조건부 지원을 지지한 반면, 진보는 63.7%만 그에 공감했다. 반대로 진

보는 36.3%가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경제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고, 이에 동의한 보수는 8.4%에 불과했다.

- 남북 간 전쟁 가능성에는 57.3%(2020년)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답은 42.7%였다.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한 응답자는 39.7%가 미국의 개입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이유로 들었고, 36.4%는 전쟁을 치르기에 북한의 경제력이 취약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이들은 55.9%가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남북 간 전쟁 가능성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평가했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비율은 20대에서 54.9%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는 60세 이상이 44.5%였다. 다른 연령대는 40대 39.5%, 30대 38%, 50대 36.6% 순이었다. 30~50대가 전쟁 위협을 덜 느낀 이유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수차례 겪으면서 도발이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우리 군의 대북 역지에는 불신이 높았다. 72.3%가 우리 군이 단독으로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막을 수 있다: 27.7%). 단독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67%가 한국군이 단독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이길 수 있다: 33%). 이러한 한국인의 대북 역지 인식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2020년 한국인의 94.9%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93.3%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2020년, 69.3%는 독자 핵개발을 지지했다(반대: 30.7%). 2010년(찬성: 55.6%, 반대: 44.5%) 이래 절반 이상이 핵 개발을 지지했으나, 2019~2020년에는 각각 67.1%, 69.3%가 자체 핵무기 개발에 지지를 보였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북핵 대응으로 핵무기 개발을 택한 비율이 더 늘었다.
-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2012년 이래 높게 지속됐다. 이는 ‘향후’, ‘통일 후’로 나눠 한미동맹이 필요한지를 묻은 결과였다. 향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대로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봤다(2017년: 95.6%, 2018년: 94.1%, 2019년: 91.9%, 2020년: 95.9%). 통일 후를 가정해 물었을 때, 80%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다수가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2017년: 80%, 2018년: 85.2%, 2019년: 80.4%, 2020년: 86.3%).

- 2014년부터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해야 하는지도 ‘향후’, ‘통일 후’로 나눠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는 답은 2017년 80.6%, 2018년 76.3%, 2019년 74.7%, 2020년 72%로 다수였다. 통일 후를 가정해 물었을 때는 40% 내외가 주둔해야 한다고 답했다(2017년: 35.1%, 2018년: 49.5%, 2019년: 44.1%, 2020년: 46.3%).
- 한미동맹 이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해서도 물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조건 충족시에만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가 42.5%로 가장 많았다. ‘조건과 관계없이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야 한다’는 27.2%였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논란이 됐던 방위비분담금에는 41.1%가 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보다 인하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보다 낮게 인상해야 한다는 각각 23.4%, 23.1%였다.
-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는 북한(55.8%)을 꼽았다. 중국이라고 한 응답은 25.9%였다(미국: 6.1%, 러시아: 0.4%). 통일 후를 가정해 같은 문항에 답하게 했을 때, 중국이 안보위협이 될 것이란 응답은 66.7%나 됐다. 일본이 통일 후 안보위협이 될 것이란 비율은 23.1%였다(미국: 8.1%, 러시아: 1.5%).
- 주변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물었다. 2020년, 대부분은 일본(71.5%), 북한(68.9%), 중국(66.3%), 러시아(55.4%)가 우리나라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유일하게 미국에 대해서만 긍정 영향이 63.6%로 다수였다(부정: 17.6%).

2. 한반도 정세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정부 정책에 함의를 갖는다. 국내 여론은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적절한 대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정부에 하나의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정책입안자 입장에서는 외교·안보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 추이를 추적하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2.1 북한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역사, 민족성,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국인에게 북한은 안보위협이면서 통일을 해야 할 한민족이라는 모순적 존재이다. 또 북한은 핵개발로 역내 정세를 위협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기도 해서다.

다음에서는 통일, 남북관계, 안보위협 인식, 대북정책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봤다. 이에 대한 인식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각각에 대한 의견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북한을 보는 하나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 통일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에 대한 여론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

2.1.1 통일 인식

통일은 한국전쟁 이래 정부가 지속적으로 목표해 온 정책 과제다. 그러나 실제로는 분단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남북 간 민족 동질성은 열어 졌다. 통일을 시급한 문제로 보는 한국인도 감소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이란 측면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줄면서 통일을 ‘민족사적 과제’로 보는 당위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통일 인식은 시기별로 달라졌을까?

본원은 2010년부터 10년간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을 조사했다. 2011년 이후 70% 이상은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80% 이상이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은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됐던 2018년, 85.4%

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하반기 북미(北美) 비핵화 대화가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머물면서 2020년,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한 비율은 76.9%로 소폭 하락했다 (2019년: 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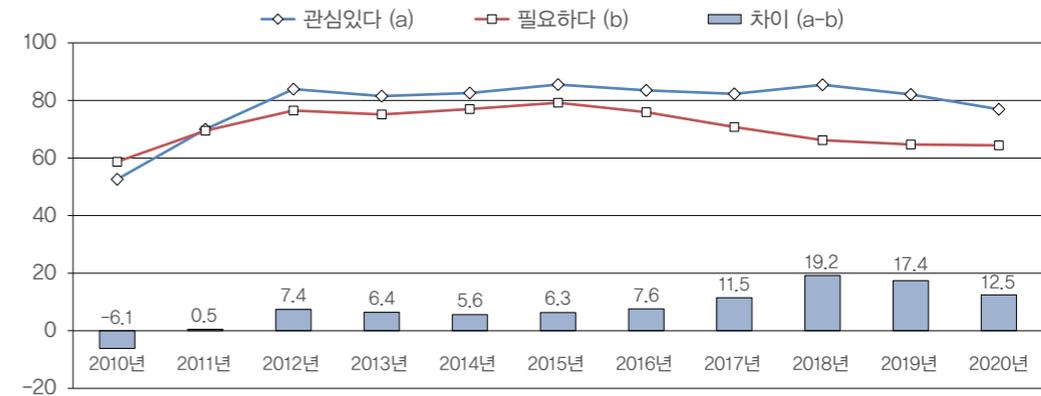
반대로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2010년, 52.6%로 가장 낮았다. 이때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이 일어난 해였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실제 목격한 시기였으므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무력도발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절반 이상이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한 점은 흥미롭다.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이중적 정서가 드러난 대목이다.

이와 더불어, 본원의 조사는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물었다. 관심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이 역시, 2011년 이래 70% 내외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고치를 기록한 해는 2015년으로 79.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을 경제적 시각에서 보게 한 대통령의 연설로 당시 통일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이 80%에 가까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통일이 필요하다고 본 비율은 한반도 정세 변화와는 별개로 점차 줄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70.8%로 시작한 이 수치는 2018년 66.2%, 2019년 64.7%, 2020년 64.4%로 연이어 하락했다. 북한, 남북관계 등에 대한 인식이 2018년을 전후로 크게 반전된 것과 대조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은 최고치를 기록한 2015년 후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롤러코스터를 탄 한반도 정세가 대북 인식에는 영향을 줬지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하진 못한 것이다.

통일에 대한 관심은 2018년, 최고치를 기록했기에 관심과 필요성 평가의 차이(a-b)는 같은 해 19.2%p로 가장 컸다. 통일에는 관심이 있다고 했지만, 필요하다고 본 비율은 그만큼 나오지 않으며 둘 사이 격차도 컸다.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가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통일 관심도가 하락했기에 ‘관심-필요’의 차이는 다소 줄었다. 흥미롭게도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둔 문재인 정부 시기에만 둘 사이 차이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는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 이상 즉 통일이 필요하다고 본 비율은 그에 미치지 못해 나타난 결과였다.

그림 1. 한국인의 통일 인식: 관심 및 필요성 평가⁴ (%)



통일에 대한 관심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고령층인 50대(80.5%), 60세 이상(78.5%)은 80% 내외가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한 반면, 젊은 층은 70% 초반만 동일한 답을 했다 (40대: 76.6%, 30대: 73.5%, 20대: 73.3%). 이는 한국전쟁에 대한 직간접 경험 수준, 북한에 가족·친척 등 혈연이 있는지가 달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쟁의 상흔과 이산가족에 대한 정서적 거리가 젊은 층에는 다소 멀 수밖에 없어 나타난 차이였다. 그러나 전쟁 후 분단이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인 10명 중 약 7명 이상이 통일에 관심을 보인 점은 유의할 만하다.

통일 방식에 대해선 관심과 달리, 의견이 둘로 나뉘었다. 절반이 넘는 52.1%가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5.9%는 남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고 했다(북한식 흡수통일: 0.1%). 연방제 통일 방식을 선호한 의견이 다소 앞섰지만, 남한식 흡수통일을 선호한 비율도 적지 않았다. 통일 방식에 대한 의견은 이념성향에 따라 달랐다. 보수는 남한식 체제로의 통일을 선호했다(남한식 흡수통일: 55.5%, 연방제 통일: 40.4%). 이와 달리, 진보는 연방제 통일 60.6%, 남한식 흡수통일 38.3%로 연방제 통일에 대한 선호가 22%p 이상 높았다(중도-연방제: 51.1%, 남한식: 47.3%).

통일 추진 방식에 대해선 53.5%가 여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해 통일을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선호했다.

4. 출처: 아산연례조사(2010~2020년).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을 넘었지만, 40대(59.4%)와 50대(56.4%)에서 더 뚜렷했다. 다음으로는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5.5%였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한 비율은 4명 중 1명꼴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10.9%,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10.1%로 비슷했다. 통일 추진 방식에서 드러난 여론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통일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조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대체로 높았는데, 인식 변화가 포착된 시기는 북한과 관련된 사건(예: 무력도발, 핵실험, 비핵화 회담 등)이나 국가 지도자의 언행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 때였다. 통일 인식은 개인 성향에 따라서도 다소 달랐는데, 이는 연령대와 이념성향에 따라 북한을 보는 시각과 관련 경험이 달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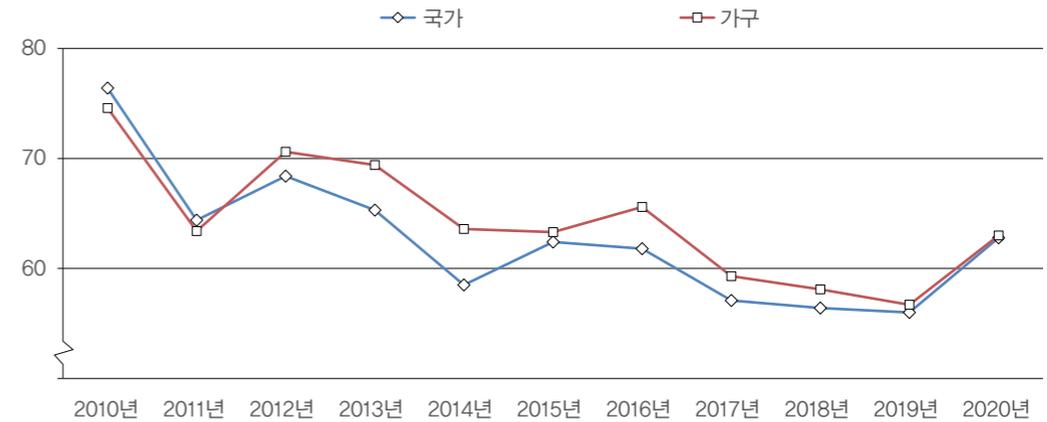
2.1.1a 통일의 경제효과

한국인의 통일 인식은 통일로 인한 경제효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족 동질성 회복, 이산가족 고통 해소 등은 통일이 이뤄질 경우 주로 기대되는 점이다. 이에 더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당위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통일에 관심을 더 할 수 있는 요인이다. 통일이 경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할수록 통일에 관심을 갖고, 통일을 시급한 문제로 볼 개연성이 높다. 다음에선 통일의 경제효과를 국가, 가구(개인)로 나눠 살펴봤다.

2010~202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통일 후 국가·가구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효과에 대해선 부정이 긍정 전망을 크게 앞섰는데, 이는 통일 및 대북정책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함의가 크다. 부정 전망은 2010년(국가: 76.4%, 가구: 74.6%)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2020년에도 여전히 60% 이상이 통일 후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국가: 62.8%, 가구: 63%). 독일이 통일 후 겪은 경제적 어려움이 알려진 탓도 일부 있어 보인다.

한반도 정세가 크게 반전된 2019년, 통일의 경제효과를 부정적으로 본 비율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한 응답은 국가 56%, 가구 56.7%였다. 경제 기대효과에 대한 두 전망치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r= 0.936$). 경제효과 전망이 국가·개인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는 뜻이다. 앞서 2015년 '통일 대박론'이 경제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게 한 면이 있지만, 당시에 통일 경제효과는 부정 전망이 다수였다(국가: 62.4%, 가구: 63.3%).

그림 2. 통일의 경제효과: 부정 전망⁵ (%)



통일 후 국가·가구 경제에 대한 부정 전망은 여성(국가: 66.3%, 가구: 67.5%), 60세 이상(국가: 65.8%, 가구: 69.1%)과 젊은 층(20대-국가: 65.9%, 가구: 69%, 30대-국가: 68.4%, 가구: 67.1%)에서 더 분명했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도 보수는 각각 77.3%, 75.9%가 국가, 개인의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좋아질 것-국가: 22.7%, 가구: 24.1%)으로 본 반면, 진보는 전망이 나뉘었다(국가·가구-나빠질 것: 50.5%, 좋아질 것: 49.5%). 고령층과 보수는 북한을 적대적으로 봤기 때문에, 여성과 젊은 층은 현실적으로 취약한 북한 경제를 고려해 부정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로 다른 근거로 통일의 경제효과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셈이다.

통일이 가구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전망은 가구소득과 관련이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통일이 가구경제에 미칠 효과를 부정적으로 봤다(부정전망-200만원 미만: 68.4%, 200~400만원: 67.7%). 월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응답층에선 부정 전망이 55.9%에 그쳤다. 이와 달리, 통일 후 국가경제 전망은 가구소득과 선형관계에 있지 않았다. 통일 효과에 대한 부정 전망은 중하위 소득층(200~400만원: 64.8%)에서 가장 높았다. 나머지 소득구간별 부정 전망은 60%대 초반으로 거의 비슷했다.

위에서 밝혀진 통일과 경제의 관계는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하는지를 묻은 결과에서 더 두드러졌다. 조사에서는 국가·본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통일

5. 출처: 아산연례조사(2010~2020년).

이 이뤄져야 하는지 물었다. 2020년, 한국인 중 다수는 경제적 희생이 크다면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가나 본인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가정해 답하게 했는데, 각각 60.7%와 58.9%가 경제적 희생이 크다면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경향은 여성과 보수에서 비교적 뚜렷했다. 본인의 경제상황 악화를 가정한 상황에서는 여성 63.1%, 보수 65.4%가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또 국가 경제상황 악화를 가정한 상황에서는 여성 63%, 보수 66.9%가 그에 동의했다.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 경제적 희생이 요구된다면 통일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즉 경제효과가 통일 인식에 영향을 미친 단일 요인은 아니었지만, 통일의 경제효과를 부정적으로 볼수록 통일을 시급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추가로 통일을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통일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는 2011년, 2020년 총 두 차례 개방형 문항(open-ended question)으로 본원 조사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조사에선 기본적 조세 부담과 별개로 통일을 위해 추가 세금을 얼마나 낼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⁶ 2020년 한국인은 1년에 평균 40만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2011년: 약 39만원).

구간으로 나눠 2011년, 2020년 한국인의 통일세 부담 의향을 비교했다.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011년 20.6%에서 2020년 45.5%로 24.9%p 늘었다. 개방형 응답에 '0원'이라고 답한 비율로 9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1~10만원, 10~50만원 널 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이 각각 17.8%p, 12.4%p 줄면서 나타난 변화였다. 50만원 이상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한 비율이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50만원 부담할 의향이란 응답이 줄고, 1만원 이하 또는 추가로 낼 의향이 없다고 한 비율이 늘었다.

위의 응답이 연간 부담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부담할 의향이 거의 없다는 응답이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30%p 이상 증가했다(부담할 의향이 없다: +24.9%p, 1만원 이하: +5.5%p). 통일 인식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달랐던 것처럼 2020년 통일세 부담 의향도 마찬가지였다. 추가 부담액 기준으로 남성(55만원), 고소득층(600만원 이상: 54만원), 진보(60만원)가 여성(25만원), 저소득층(200만원 미만: 24만원), 보수(26만원)에 비해 통일세를 더 많이 부담할 의향을 내비쳤다.

6. 부록 2: 설문지. 문항8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1. 통일세 부담 의향⁷ (%)

	2011년 (a)	2020년 (b)	변화 (b-a)
부담할 의향이 없다	20.6	45.5	+24.9%p
1만원 이하	10.0	15.4	+5.5%p
1만원 초과~10만원 이하	34.5	16.7	-17.8%p
1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20.5	8.1	-12.4%p
50만원 초과	14.5	14.3	-0.2%p

이와 더불어, 통일세 부담 의향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했다. 연령, 이념성향, 국가·가구 경제 평가, 통일 필요성 등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통일세 부담액(원)을 종속변수로 설정했다(표 2 참고). 2011년과 2020년 자료를 이용해 동일한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응답자 이념성향과 통일 필요성 인식이 통일세 부담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한국인은 이념성향이 진보일수록, 또 통일이 필요하다고 볼수록 추가로 더 많은 통일세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20년 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통일 인식과 경제의 관계는 통일을 가정한 우려되는 점을 물었을 때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국인은 29.3%가 통일이 될 경우 우려되는 점으로 통일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의 빈부격차를 우려되는 점이라고 한 비율도 13.5%였다. 이 둘은 통일이 될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었다. 다른 우려되는 점으로는 가치관(이념 등) 혼란 21.2%, 남북 간 생활·문화 차이 13.3%, 정치 혼란 12.3%가 있었다. 범죄·치안, 남북한 군사통합을 우려되는 점으로 꼽은 비율은 각각 6.9%, 3.3%였다.

반대로 통일이 될 경우 기대되는 점을 물은 결과에서도 경제효과와 관련된 응답이 꽤 있었다. 34.4%는 전쟁 위험성 해소를 꼽았고, 북한의 자연자원 활용이 16.8%, 남한 기술력과 북한 노동력 결합이 14.1%로 나타났다. 전쟁 위험이 없어지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낮아진다는 점, 남북이 경제적으로 시너지를 낼 부문 등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다른 기

7. 출처: 아산연례조사(2011년, 2020년).

표 2. 통일세 부담 의향에 영향을 미친 요인

변수	표준화 계수		수정된 R ²	F	p
	β	ρ			
2011년 (n=2,000)					
연령	-.004	.869	.002	1.614	n.s.
이념성향	.043	.063			
국가 경제	.020	.458			
가구 경제	-.041	.135			
통일 필요성	-.029	.197			
2020년 (n=1,500)					
연령	-.033	.198	.027	9.449	.000
이념성향	.057	.031			
국가 경제	-.022	.482			
가구 경제	.046	.123			
통일 필요성	-.145	.000			

주. 이념성향(1=보수, 5=중도, 11=진보), 경제 평가(1=매우 나빠졌다, 2=나빠졌다, 3=비슷하다, 4=좋아졌다, 5=매우 좋아졌다), 통일 필요성(1=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2=여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 추진해야 한다, 3=통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4=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대되는 점으로는 대한민국 영토 확장 11.9%, 이산가족 고통해소 9.5%, 국제 외교력 신장 8.1%, 민족 동질성 회복 4.5%를 꼽았다.

표 3은 한국인의 국가·가구경제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한 개인이 통일의 경제 효과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통일 인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인의 국가·가구경제 평가는 중요해 보인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국가·가구경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2020년에는 각각 77.9%, 57.9%가 국가·가구경제를 1년 전에 비해 나빠졌다고 답했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특히 국가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가구경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즉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가구부채, 청년실업, 소득불평등 등 경제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제 인식이 나아질수록 통일에 더 관심을 갖고, 통일을 시급한

표 3. 과거 1년 대비 경제상황 평가⁸ (%)

	국가경제		가구경제	
	2011년	2020년	2011년	2020년
나빠졌다	58.3	77.9	50.3	57.9
비슷하다	36.1	16.3	43.8	36.6
좋아졌다	5.6	5.8	5.9	5.5

문제로 볼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편으로는 ‘통일 대박론’처럼 통일의 경제효과를 쉽게 알릴 수 있는 담론을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2.1.2 남북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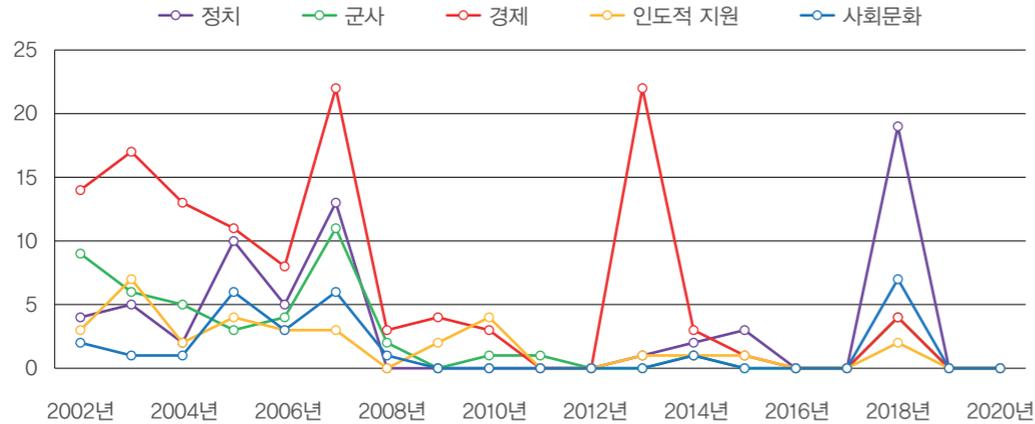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 후,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있다. 북미 비핵화 대화가 2019년 10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 후 중단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이어지며 평화 무드가 형성됐던 때와는 대조를 이룬다. 2020년에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대북전단 논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실종 사건 등으로 경색국면이 이어졌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남북접촉 횟수를 보더라도 이 경향은 드러난다. 2018년 정치, 군사, 경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등에서 이뤄진 남북대화는 총 36회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당시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내 남북 간 접촉 횟수는 크게 줄면서 2018년 이전 수준이 됐다.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바뀌었다. 본원은 2011년부터 응답자에게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북한이 ‘우리’, ‘이웃’, ‘남’, ‘적’ 가운데 어느 것에 가장 가까운지 조사했다. 북한을 우리 또는 이웃으로 본 우호 시각은 절반 내외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50% 중후반을 기록하다 2020년, 49%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평화·화해무드

8. 출처: 아산연례조사(2011년, 2020년).

그림 3. 2002~2020년 유형별 남북대화⁹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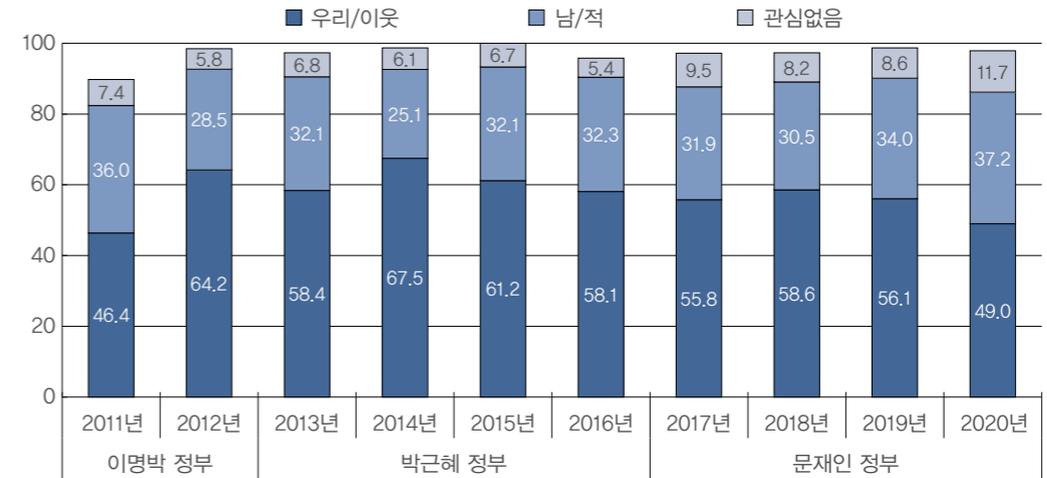
가 조성됐던 2018년에는 북한을 우호적으로 본 비율이 58.6%였다. 2017년 대비 소폭 상승했던 우호 시각은 2019년 56.1%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50% 중후반대를 유지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인의 인식도 나빠진 것이다.

2018년을 전후로 롤러코스터를 탄 한반도 정세는 대북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2011년 이래 북한을 남 또는 적으로 본 적대 시각은 30% 내외였는데, 2020년에는 37.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11년, 북한을 적대적으로 본 비율(36%)보다 높았다. 2010년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의 2020년 결과는 유의할 만하다. 북한에 대한 적대 시각이 임계치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이념성향에 따라 엇갈렸다. 보수가 북한을 우리 또는 이웃으로 본 비율은 28.5%에 그친 반면, 진보는 66.6%가 북한을 우호적으로 봤다. 반대로 북한을 남 또는 적으로 본 비율은 보수에서 57.3%로 높았고, 진보에선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25.8%). 이는 북한을 얼마나 실질적 안보위협으로 간주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보수는 진보에 비해 북한을 더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북한을 적대적으로 본 것이다.

9. 출처: 통일부, 부록 1의 그림 1, 그림 2를 보면 남북 인적교류와 교역량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16년 4월, 정부의 전격적 공단 폐쇄로 줄어든 인적교류, 교역량은 2018년 소폭이지만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다시 인적교류, 교역량이 줄면서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림 4. 시기별 한국인의 대북 인식¹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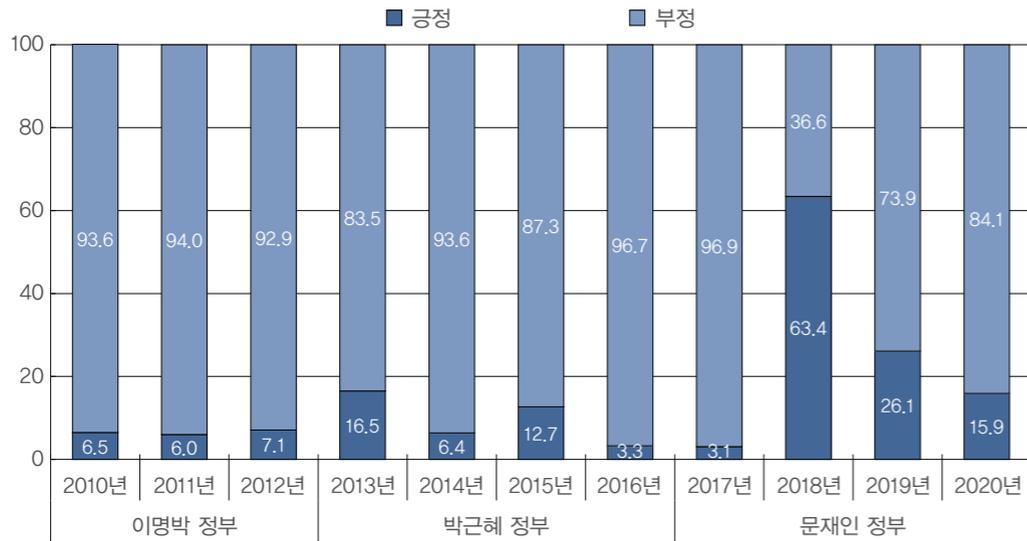


대북 인식과 함께 남북관계 인식을 조사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부터 2020년 문재인 정부까지 매년 응답자에게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표면적으로 남북관계 인식은 2018년을 빼면 부정이 긍정 평가를 크게 앞섰다.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된 2017년까지 한국인은 90% 내외가 남북관계가 나쁘다고 답했다. 90% 이상이 남북관계를 부정적으로 본 이명박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인은 일시적이지만 부정 시각이 8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2013년: 83.5%).

지난 10년 사이 남북관계 인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북미·남북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린 2018년에 나타났다.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된 이 시기, 한국인의 63.4%는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6.6%로 지난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앞서 기술했듯이, 한반도 정세가 2019년 북미 비핵화 대화 결렬로 다시 반전되며 남북관계 인식도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2019년, 2020년 남북관계를 부정적으로 본 비율은 각각 73.9%, 84.1%로 다수를 차지했다. 긍정 평가는 차례로 26.1%, 15.9%로 줄면서 다시 소수가 됐다.

10. 출처: 아산연례조사(2011~2020년). 응답자에게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를 답하게 했다. '우리', '이웃', '남', '적'으로 답한 결과를 각각 우호('우리', '이웃'), 적대('남', '적')로 나눠 분석했다. 그림 4는 아래 이슈브리프의 그림 1에 최근 조사 결과를 추가한 것이다. 김지윤·강충구·김길동. 2018. "젊은 층의 대북·통일 인식" 이슈브리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그림 5. 시기별 한국인의 남북관계 인식¹¹ (%)



추가로 남북관계 인식이 극적으로 변한 2018년과 2020년 결과를 직접 비교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2년 사이 변화를 하위집단별로 분석했다. 남북관계 부정 인식은 36.6%에서 84.1%로 2년 사이 47.5%p나 증가했다. 한반도 정세가 바뀌면서 부정 인식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성별, 연령대,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변화폭은 컸다. 먼저 성별은 남성, 여성 모두 2년 사이 부정 인식이 각각 49.8%p, 45.2%p나 상승했다. 성별에 관계없이 부정 인식이 크게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변화폭(51.3→86.9%=+35.6%p)이 비교적 적었다. 20~50대에선 부정 인식이 50%p 내외 늘어 2020년, 80% 전후가 남북관계를 부정적으로 봤다. 60세 이상은 변화폭은 적었으나 2018년에도 부정 인식이 51.3%였기 때문에 2020년, 86.9%가 됐다.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20대 85.1%, 50대 8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보수, 고령층, 20대의 순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가 나뉘었다.

2018~2020년 이념성향에 따른 남북관계 부정 인식의 변화폭은 진보(+59.6%p), 중도(+48%p), 보수(+33.8%p)의 순으로 컸다. 반면, 2020년 부정 인식은 보수(92.2%), 중도

11. 출처: 아산연례조사(2010~2020년).

(85.8%), 진보(77.1%)의 순으로 높았다. 이는 평소 남북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보수에서 높고, 진보에서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보수는 2018년,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됐던 때에도 다수인 58.4%가 남북관계를 부정적으로 봤다(진보- 부정 인식: 17.5%).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남북관계 인식: 부정 인식¹² (%)

		2018년 (n=1,200)	2020년 (n=1,500)	변화
전체		36.6	84.1	47.5
성별	남성	33.2	83.0	49.8
	여성	39.9	85.1	45.2
검정값		$\chi^2=5.768, df=1, p<.05$		n.s.
연령대	20대	31.1	85.1	54.0
	30대	24.4	79.1	54.7
	40대	31.7	82.2	50.5
	50대	37.8	84.9	47.1
	60세 이상	51.3	86.9	35.6
검정값		$\chi^2=42.249, df=4, p<.001$		n.s.
이념성향	보수	58.4	92.2	33.8
	중도	37.8	85.8	48.0
	진보	17.5	77.1	59.6
검정값		$\chi^2=135.379, df=2, p<.001$	$\chi^2=38.046, df=2, p<.001$	

다음으로 2020년,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은 결과를 살펴봤다. 다수인 66.3%는 북한을 지목했다. 나머지 즉 미국, 중국, 우리나라를 꼽은 비율을 모두 합해도 이에 미치지 못했다. 그만큼 한국인은 북한이 남북관계 악화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가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답은 6.3%로 소수였다.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중국을 꼽은 비율은 각각 14.4%

12. 출처: 아산연례조사(2018년, 2020년).

(a), 13.1% (b)로 비슷했다. 두 나라의 영향으로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고 한 응답(a+b)은 27.5%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별개로 북한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본 시각이 짙었다. 모든 연령대·이념성향에서 60% 이상이 북한을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경향은 60세 이상(71.7%), 보수(68.8%)에서 두드러졌다. 다른 연령대·이념성향에 비해 북한을 지목한 비율이 70%내외로 높았다. 유의할 대목은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본 응답이 보수 7.9%, 진보 22.1%로 큰 차이가 났다는 점이다. 과거부터 진보가 북한에 포용적이고 반미(反美) 성향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대북 경제지원은 과거부터 큰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이념성향에 따라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이 크게 나뉘어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사실 대북 경제지원 문항은 정부의 정책안을 강경책, 유화책으로 구분해 그에 대한 지지를 묻는 것과 같았다(표 5 참고). 본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분형(dichotomous) 응답지를 제공하고, 둘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답하게 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인은 다수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대북 경제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소 68.5%(2012년), 최대 78.7%(2020년)가 대북 경제지원이 조건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2011~2020년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조건부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지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2019년 72.3%까지 조건부 지원에 대한 지지가 떨어졌으나 2020년 78.7%가 됐다.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 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조건부 지원에 대한 지지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대북 지원이 북한의 핵 개발에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는 각각 진보, 보수 진영에서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찬반의 근거로 드는 것이다. 2020년 조사에서도 남남갈등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 보수는 91.6%가 조건부 지원을 지지한 반면, 진보는 63.7%만 그에 공감했다. 진보는 36.3%가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경제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한 반면, 이에 동의한 보수는 8.4%에 그쳤다.

대북정책에 있어 이러한 여론은 대북제재에 대한 의견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에서는 11점 척도 즉 0점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 10점 ‘대북제

표 5.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의견¹³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계속돼야 한다	26.6	31.5	24.8	31.3	27.8	24.7	22.0	23.5	27.7	21.3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	<u>73.4</u>	<u>68.5</u>	<u>75.2</u>	<u>68.7</u>	<u>72.2</u>	<u>75.3</u>	<u>78.0</u>	<u>76.5</u>	<u>72.3</u>	<u>78.7</u>

재를 해제하고 남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물었다. 이 문항에 한국인은 56.9%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반대로 제재를 해제하고 남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9.5%였고, 어느 것도 택하지 않은 비율은 13.6%였다. 중립 응답지가 있어 경제지원과 제재 해제에서 강경책 지지가 21.8%p 차이(조건부 경제지원: 78.7%, 제재해제 반대: 56.9%)가 난 것으로 보인다.¹⁴

대북 경제지원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에도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20대(63.1%), 60세 이상(61.8%)이 대북제재 해제를 더 반대했고, 남북협력 강화를 지지한 비율은 40대(36.7%), 50대(32.6%)에서 높았다. 이 경향은 이념성향에 따른 분석에서 더 뚜렷하게 보였다. 보수는 77.9%가 대북제재 해제를 반대했고, 16%만 남북협력 강화를 지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진보는 제재해제 반대, 남북협력 강화를 선호한 비율이 각각 43.1%, 46.1%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봤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대응은 부족하다. 북한에 포용적인 진보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한국인은 북한 주

13. 출처: 아산연례조사(2011~2020년).

14. 이에 반해, 유화책인 대북 경제지원과 남북협력 강화를 지지한 응답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경제지원 지속: 21.3%, 남북협력 강화: 29.5%=8.2%p). 대북정책에 대한 두 문항의 응답 결과를 강경책, 유화책으로 나눠 비교했다.

민이 겪고 있는 인권 상황에 94.9%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북한 인권문제를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는 응답도 78.3%로 다수였다.

위의 결과를 보면, 한국인은 대체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에 뒀다.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지만, 대북정책에는 강경책이나 조건부 대응을 선호했다. 대북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은 이념성향에 따라 나뉘었다. 경제지원, 제재완화 등에 대한 입장이 남북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한편으로 남북관계 인식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달라졌으므로, 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북여론 변화를 무시해선 안 되지만 이에 휘둘러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2.1.3 북한의 안보위협

한국인은 북한에 양가적 감정을 드러냈다.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인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핵개발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북한에 대한 이중적 감정은 대북·안보 관련 사건(예: 무력도발, 정상회담 등)에 의해 어느 한 측면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 연령대, 이념성향에 따라 북한에 긍정 또는 부정 정서를 더 드러내거나 덜 드러냈다. 예를 들면 남성, 고령층, 보수는 여성, 젊은 층, 진보에 비해 북한을 실질적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더 부정적으로 봤다.

한국인의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본원은 2011년 이래 한국인의 대북(對北) 위협 인식을 여러 문항으로 조사해왔다. 먼저 응답자에게 전쟁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를 살펴봤다. 이는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과 같은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결과였다. 해당 기간 차이는 있었지만 북한의 위협은 상존했다. 앞서 발표한 결과에서도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봤다.¹⁵ 아래는 2020년 조사결과다.

한국인의 57.3%는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전혀 가능성이 없다’, ‘별로 가능성이 없다’)으로 봤다. 가능성이 있다고 한 응답(‘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매우 가능성이 높다’)은 42.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40대(39.5%), 30대(38%), 50대(36.6%)에서 비교적 적었다. 흥미로운 점은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비

15. 김지윤·강종구·김길동. 2018. “젊은 층의 대북·통일 인식” 이슈브리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율이 20대(54.9%)에서 절반을 넘었다는 것이다. 고령층인 60세 이상(44.5%)과 비교해도 10%p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위협 인식이 개인의 경험과 정보처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했다.¹⁶ 젊은 층은 한국 전쟁과 같은 전면전에 대한 경험이 없음에도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인 것으로 봤고, 70년 이상 지났지만 전쟁을 경험한 고령층은 북한의 위협에 강한 부정 정서를 드러냈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30~50대는 전쟁에 대한 안보위협을 덜 실질적인 것으로 판단해 전쟁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전쟁 위협을 상대적으로 낮게 본 이유는 북한의 도발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무력도발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는 전쟁 가능성 평가에서도 나타났다. 북한을 한반도 안보에 있어 중대한 위협으로 보는 경향이 짙은 보수에서만 절반 이상(51.2%)이 전쟁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낮음: 48.8%). 다음으로는 중도가 절반에 가까운 48.6%로 나타났다(낮음: 51.4%). 진보에서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비율은 30.8%로 보수와 20%p 이상 차이가 났다. 비핵화 대화가 사실상 중단되며 남북관계가 경색됐고, 재개된 북한의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됐지만 진보는 69.2%가 전쟁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다르게 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641명)고 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55.9%는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정은 정권의 독재체제 유지 관성이 전쟁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미국 등 강대국의 외교, 경제, 군사적 압박이나 북한의 무력통일 시도가 원인이 될 것이란 응답은 각각 21.7%, 17%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¹⁷ 흥미롭게도 외부 압력을 한반도 전쟁의 원인으로 꼽은 비율은 진보에서 30.4%로 높았다(보수: 11.9%). 이는 강대국 특히, 미국에 대한 진보의 평소 입장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16. Ifat Maoz and Clark McCauley. 2009. “Threat Perceptions and Feelings as Predictors of Jewish-Israeli Support for Compromise with Palestinians” *Journal of Peace Research*, 46(4): 525-39; Moran Bodas, Maya Siman-Tov, Shulamith Kreitler, and Kobi Peleg. 2015. “Perception of the threat of War in Israel – implications for future preparedness planning.” *Israel Journal of Health Policy Research*, 4: 35.

17.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쟁 가능성의 이유로 꼽은 비율은 5.1%로 소수였다.

반대로 전쟁 발생 가능성이 낮다(859명)고 한 응답자가 꼽은 이유를 살펴봤다. 39.7%는 미국의 개입에 대한 북한의 우려 때문이라고 했고, 36.4%는 전쟁을 치르기에는 북한의 경제력이 취약하다고 봤다. 한국인 사이 미국의 대북 억지에 대한 합의가 일정 수준 존재했고, 북한 경제의 취약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기타 이유로는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7.6%), 북한이 민족 간의 전쟁을 피하려고 할 것이란 점(7.5%), 한국 국방력에 대한 두려움(4.3%) 등을 꼽았다.

대북 억지에 대한 불신은 북한의 도발을 단독으로 막을 수 있는지 묻은 결과에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한국군이 미군의 도움 없이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72.3%는 우리 군이 미군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막을 수 있다: 27.7%). 이 비율은 여성(79.9%; 남성: 64.5%), 60세 이상(77.8%), 30대(77.4%)에서 더 높았고, 이념성향에 따라 더 크게 엇갈렸다. 북한의 전쟁 도발을 단독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응답은 보수 81.1%; 진보 63.7%로 20%p 가까이 차이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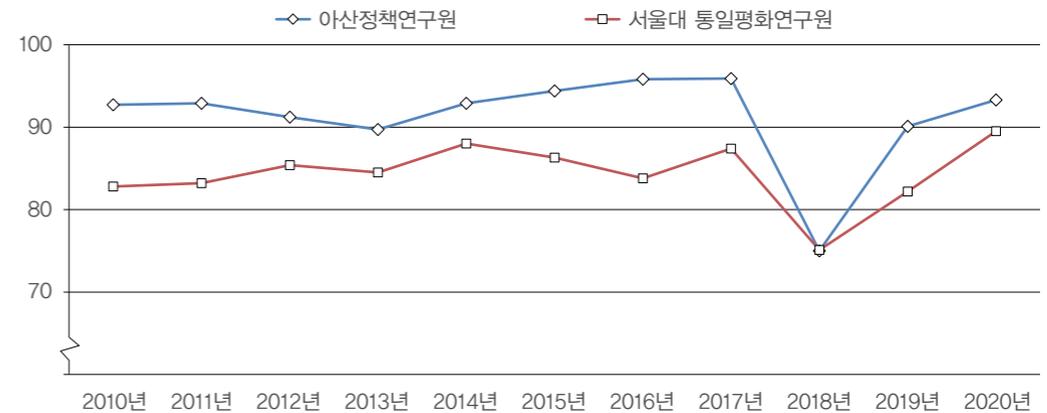
남북 간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한국군이 단독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도 물었다. 다수인 67%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단독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답했다.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한 응답은 33%에 그쳤다. 이는 성별, 연령대별, 이념 성향별로 다소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79.3%, 남성: 54.5%), 고령층(60세 이상: 75.2%, 50대: 67.1%), 보수(73.5%)가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편이었다.

한국군의 대북 억지력에 대한 불신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94.9%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 중 93.3%(2020년)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이는 2010년 이래 반복된 아산정책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 동일하게 드러났다. 유일하게 평창동계올림픽, 북미·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됐던 2018년에만 부정 전망(‘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응답)이 75%대로 감소했다. 이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렀고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재개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90%내외가 됐다(본원: 93.3%,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89.5%).

유의할 점은 2018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응답이 일시적이지만 75%까지 감소했다는 것이다. 당시 북미간 정상회담이 최초로 성사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에 대한 기대가 크게 상승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비핵화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망도 다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2019년, 2020년 점차 기존 수준에 가깝게 부정 전망이 늘어난 것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점차 닫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6. 한국인의 북한 비핵화 전망: 부정 전망¹⁸ (%)



2020년 조사에선 남북 간 전쟁 발발 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전망이 52.9%,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47.1%로 오차 범위 내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비율을 크게 밀돌았다. 이는 전시 상황이 된다 해도 핵무기 사용에는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56.8%; 남성: 49%), 20대(64.3%)와 60세 이상(55%)이 다른 응답층에 비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게 봤다(30대: 52.1%, 50대: 47%, 40대: 46.5%).

18. 출처: 아산연례조사(2010~2020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0~2020년, <https://ipus.snu.ac.kr/blog/archives/publishing/4767>). 2018년 6월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비율이 56%로 절반을 넘었다. 또 2021년까지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 핵시설을 폐기할 것이란 전망도 38%만 그럴 것이라고 했다. 흥미로운 점은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70%가 부정적이었다(공정적: 27%). 당시 최초로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이었다 (출처: CNN, <https://edition.cnn.com/2018/06/19/politics/north-korea-cnn-poll/index.html>).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응답자의 경험과 정보처리 수준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겹쳤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위협에 더 민감하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지지한다.¹⁹ 이념성향도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남북전쟁 발발 시 중도(57.9%), 보수(57.8%)는 진보(44.2%)에 비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10%p이상 높게 봤다. 이는 이념성향이 대북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2.1.4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한국인의 대북(對北) 위협 인식은 북핵 대응 및 대북정책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협력, 압박, 체제보장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 대응을 제시했을 때 한국인은 어떤 정책을 선호할까? 본원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2011년부터 반복 조사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 지속적 군사압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북한의 도발, 무력시위, 핵개발, 미사일 고도화 등이 시기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대북정책으로 군사압박을 선호한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적었다. 2020년에도 6.3%에 불과했다. 대신에 남북 경제협력 강화가 42.7%로 가장 높았다. 지속적인 경제압박과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은 각각 29%, 22%로 비슷했다.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나온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절반을 넘었다. 2016~2017년, 북한의 핵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경제협력보다 경제압박을 선호하는 비율이 각각 41.6%, 44.5%로 다수를 차지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협력, 경제압박을 택한 응답이 절반을 상회한 것으로 드러나 어떤 방향이든 경제를 통한 해결책을 선호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반도 정세가 크게 뒤바뀐 2018년 이후,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을 선호한 한국인의 비율이 20%대까지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

앞서 대북 위협 인식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기에 대북정책에도 성별, 연령대, 이념성향별로 선호가 달랐다. 남성이 경제협력(35.9%)과 경제압박(30.4%)

19. Jan L. Hitchcock, 2001, "Gender Differences in Risk Perception: Broadening the Contexts," *RISK: Health, Safety & Environment*, 12(3): 179-204.

을 비슷하게 지지한 반면, 여성은 경제협력(49.4%; 경제압박: 27.6%)을 선호했다. 60세 이상(경제협력: 36.5%, 경제압박: 30.9%)은 남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그 이하 연령대는 여성과 비슷하게 경제협력 강화를 가장 선호했다(30대: 50.9%, 20대: 46.7%, 40대: 43.7%, 50대: 40.9%).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는 이보다 더 컸는데, 보수는 경제압박(45.1%)을 선호했다. 이와 달리 진보와 중도는 경제협력을 택한 비율이 각각 48.4%, 46.5%로 가장 높았다(경제압박-중도: 29.8%, 진보: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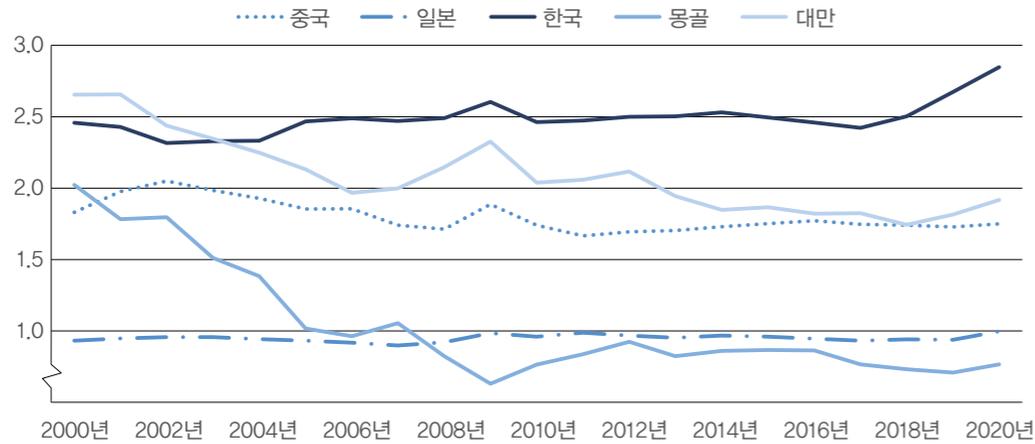
표 6. 한국인의 대북정책 인식²⁰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북 경제협력 강화	41.5	59.8	52.5	53.8	55.1	35.7	29.4	42.3	37.9	42.7
지속적인 경제압박	33.0	24.4	29.5	27.9	28.4	41.6	44.5	31.3	30.9	29.0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	18.1	10.7	11.8	13.9	10.5	13.4	17.9	22.4	25.5	22.0
지속적인 군사압박	7.5	5.1	6.1	4.4	5.9	9.3	8.2	4.1	5.7	6.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군사압박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별개인 것으로 해석된다. 2011년 이래 보수에서 진보 성향 정부로 바뀌었지만 북한을 위협으로 보는 입장은 크게 달라질 수 없었다. 실제 2010년대 북한의 무력도발은 더 빈번해졌고, 핵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최근에는 안보위협이 더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를 봐도, 우리나라 국방비는 GDP 대비 2.5%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더 늘었다.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20. 출처: 아산연례조사(2011~2020년).

그림 7. 2000~2020년 GDP 대비 국방비 지출²¹ (%)



군사압박을 상대적으로 덜 택한 이유는 핵을 보유한 북한의 군사력을 고려했을 때, 군사압박이 야기할 피해가 클 것으로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군사력에서 우리나라는 노후화된 북한군 재래전력에 비해 질적 우위를 점하지만, 미사일·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에선 북한이 앞선다고 볼 수 있어서다. 이를 극복할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원은 2010년부터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한국인 중 절반 이상은 핵무기 개발에 찬성했다. 2010~2020년 조사 결과에서 유의할 점은 2019년, 2020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비율이 67.1%, 69.3%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북핵 대응으로 핵무기 개발을 택한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국인의 북한 비핵화 전망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경향과 일맥상통한다. 북핵 위협에 맞서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76.6%), 고령층(50대, 60세 이상: 76.8%), 보수(79.4%)에서 더 높았다. 이는 대북·안보이슈, 북핵 대응에 대한 의견이 성별, 연령대, 이념성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난 과거 조사결과와 동일했다.

21. 출처: SIPRI.

한 가지 유의할 점은 2010년, 2018년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 의견이 각각 44.5%, 45.3%로 다른 때에 비해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0년에는 국지도발이 주로 일어났고, 2018년에는 평화무드가 조성되면서 북핵 위협 인식이 일시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핵무장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논의된 측면이 있으므로 대북 위협 인식이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 유형, 위협 수준의 시기별 차이가 독자 핵무장에 대한 입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핵무기 개발에 찬성(1,040명)한 이유로는 주권국가로서 핵 주권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33.7%),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33.4%), 북핵 위협에 맞 대응해야 한다는 점(32.1%) 등이 꼽혔다. 여기서는 이념성향 간 시각차가 다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보수는 핵무기 개발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40.3%), 진보는 핵 주권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40.2%)는 응답이 많았다. 핵개발을 둘러싼 정치권 내 담론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 이유(460명)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43.5%로 가장 많았다. 자체 핵개발로 인해 야기될 한반도 정세,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보다는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핵무장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 26.3%, 북한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의견이 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이유로는 소수지만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7.2%)도 있었다.

표 7. 한국인의 핵무장에 대한 인식²²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핵무기 개발											
찬성	55.6	62.6	66.0	62.9	61.3	62.3	59.9	64.1	54.8	67.1	69.3
반대	44.5	37.4	34.0	37.1	38.7	37.7	40.1	35.9	45.3	32.9	30.7
전술핵 재배치											
찬성				67.0					61.8		61.3
반대				28.8					38.2		25.0

2020년에는 자체 핵무기 개발과 더불어,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61.3%가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했다. 반대는 25%, 모르겠다는 응답은 13.7%였다. 2013년 이후 실시된 세 차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60% 이상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했다. 2017년 이후에는 독자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 비율보다는 소폭 낮았다.

앞서 살펴본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견과 동일하게 남성(71.3%; 여성: 51.4%), 고령층(60세 이상: 68.1%)과 보수층(69.8%)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이념성향에서 더 컸다. 69.8%가 찬성한 보수에 비해, 중도와 진보는 각각 60.4%, 56.9%만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진보는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의견이 31.4%로 보수(18.6%)에 비해 10%p 이상 높았다. 그만큼 전술핵 재배치가 이념성향에 따라 응답자의 입장이 달랐다는 뜻이다.

2.2 한미동맹

70년 이상 지속된 한미동맹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공감하고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미국, 2017년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정권이 바뀌면서 한때 전작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등에 대한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타결로 양국 간 불협화음이 다소 해소됐다.

다음에선 한미동맹에 대한 조사 가운데 동맹,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인식부터 살펴봤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봤다. 이어서 한미동맹과 관련된 주요 이슈 즉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을 살펴봤다. 이외에도 대미(對美) 인식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시도를 했다.

2.2.1 한미동맹과 확장억지

본원은 그 동안 정기적으로 주변국 호감도(미국, 중국, 일본, 북한)를 조사했다.²² 2013년

22. 출처: 아산연례조사(2010~2020년), 아산폴(2013년).

23. 출처: South Koreans and Their Neighbors 2019.

호감도 조사를 시작한 이래 미국은 항상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한 국가였다. 동맹관계를 오래 지속해온 만큼 한국인의 대미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향후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11점 척도: 0= 독자적 외교정책 추진, 5= 현 수준 유지, 10= 한미동맹 강화)을 물었을 때, 다수인 41%가 한미동맹 강화(6~10점)를 선호했다. 37.3%는 한미동맹이 현 수준을 유지(5점)해야 한다고 했고, 우리나라가 독자적 외교정책을 추진(0~4점)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에 불과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상관없이 한미동맹 강화, 또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안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높았으므로 양국 관계가 가깝게 유지되거나 더 가까워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상대적으로 독자적 외교정책 추진을 선호한 비율은 여성(25.6%), 40대(27.6%), 50대(27.2%), 진보(30.8%)에서 뚜렷했다. 반대로 한미동맹 강화는 남성(50.7%), 60세 이상(48.5%), 20대(43.9%), 50대(40.3%), 보수(61.6%)에서 두드러졌다.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는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평가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가정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평가하게 한 질문에서 86.6%가 전쟁 발발 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 했다.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3.4%였다. 나아가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했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한 비율도 절반을 넘었다(51.1%). 반대 응답이 48.9%로 질문 자체에는 의견이 나뉘었지만, 북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본 것이므로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가 높아 보인다.

보다 직접적으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향후’(a), ‘통일 후’(b)로 나눠 물었다. 두 문항에 한국인은 모두 긍정적이었다.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95% 전후를 기록했다.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80~85%대로 역시 다수를 차지했다. 2020년,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공감한 비율은 향후 95.9%, 통일 후 86.3%였다.

향후, 통일 후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동조한 의견(a-b)은 10%p 내외의 차이를 보였다. 통일 후를 가정한 질문은 안보불안 요인인 북한이 사라져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평가하게 한 것이다. 앞으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보다는 10%p 가량 적었지만, 여전히 85% 내외가 한미동맹을 지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점, 한미동맹이 더 광범위한 협력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점이 공

감대를 얻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8. 한미동맹의 필요성: 향후 vs. 통일 후²⁴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 (a)	94.0	96.0	95.0	94.9	94.1	95.6	94.1	91.9	95.9
통일 후 (b)	84.0	83.3	81.1	81.8	81.8	80.0	85.2	80.4	86.3
차이 (a-b)	10.0	12.7	13.9	13.1	12.3	15.6	8.9	11.5	9.6

2.2.2 한미동맹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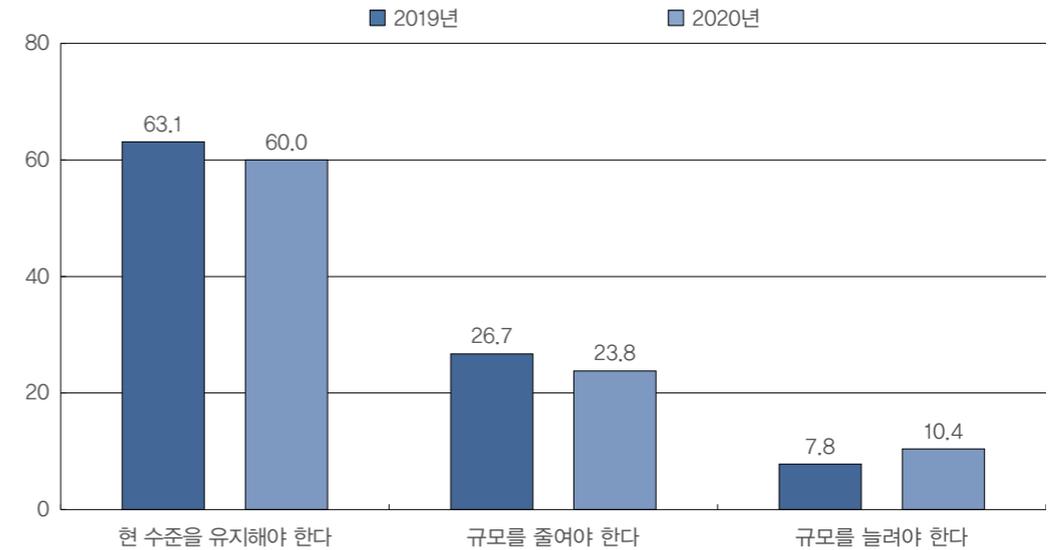
안보동맹에서 시작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 유지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반세기 넘게 지속된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 여론은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비용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협정 등에서 한때 불협화음이 일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공전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타결됐고, 전작권 전환에도 양국이 입장을 같이 하면서 갈등이 다소 해소됐다.

본원은 한미동맹에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이슈를 2020년 조사에 포괄했다. 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높았으므로 주한미군 주둔에도 다수인 72%가 지지를 보였다. 주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한 응답자(1,080명)를 대상으로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여기서도 주한미군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로 과반을 넘었다. 현재 약 2만 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10.4%나 됐다. 반면,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3.8%였다. 이는 2019년 초에 비해서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통일 후'를 가정해 물었을 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2020년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72%나 됐지만, 통일 후로 가정했을

24. 출처: 아산연례조사(2012~2020년). 2010~2011년 조사에선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물었다. 2010년 87.2%, 2011년 91.1%가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본문의 표 8에는 두 문항을 함께 물은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2012~2020년 기간의 결과만 제시했다.

그림 8. 향후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의견²⁵ (%)



때는 '주둔하지 말아야 한다' 53.7%, '주둔해야 한다' 46.3%로 의견이 나뉘었다. 근소한 차이지만 주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비율은 '향후' 조건에 비해 26%p 가량 낮았다. 2012~2020년 주한미군이 향후 주둔해야 한다고 한 비율은 꾸준히 70% 이상을 상회했다. 이와 달리, 통일 후를 가정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답하게 한 결과는 40% 내외로 최소 26%p, 최대 45%p 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는 많은 한국인이 한미동맹을 안보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수의 한국인은 현 한미동맹을 안보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통일 후'를 가정했을 때 이에 입장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을 안보를 넘어 보편적 가치동맹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양국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고려할 대목이다. 동맹을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호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짙었지만 안보위협이 사라지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할 가능성이 엿보인 셈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구분해 '통일 후' 필요성을 달리 평가한 점도 유의할 점이다.

25. 출처: 아산연례조사(2020년), 아산폴(2019년).

표 9. 주한미군의 필요성: 향후 vs. 통일 후²⁶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 (a)	67.8	80.1	80.3	78.7	82.1	80.6	76.3	74.7	72.0
통일 후 (b)			36.1	39.5	42.4	35.1	49.5	44.1	46.3
차이 (a-b)			44.2	39.2	39.7	45.5	26.8	30.6	25.7

주한미군이 통일 후에도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은 성별,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성(57.3%), 60세 이상(54.1%)이 여성(35.5%), 40대(36%)에 비해 통일 후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더 공감했다. 이 경향은 이념성향에서 더 크게 엇갈렸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본 시각은 보수 60.8%, 진보 34.5%로 보수에서 25%p 이상 더 짙었다. 보수가 미국과 한미동맹을 더 지지하는 편이고, 진보는 미국에 덜 호의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운용능력 검증평가 일정에 차질이 생겨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 이견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시기와 관계없이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2020년 12월)에 실시됐으므로 전작권 전환에 일치된 입장을 내기 전, 국내 여론을 보여준다. 조건 충족시에만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당시에 2021년 들어 양국이 합의한 방안에 대한 지지가 많았던 것이다. 이에 비해, 조건과 관계없이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야 한다는 비율은 27.2%였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방안에 대한 지지는 비교적 낮았다. 전작권 전환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7.9%로 소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추가로 살펴봤다. 남성(46.7%), 60세 이상(48.7%)이 여성(38.3%), 30대, 50대(39.3%)보다 조건부 전작권 전환을 더 지지했다. 조건부 전환,

26. 출처: 아산연례조사(2012~2020년).

조기 전환에 대한 선호는 이념성향에 따라 차이가 컸다. 보수는 조건부 전환 54.1%, 조기 전환 14.8%로 큰 차이를 보였던 반면에 진보는 조건부 전환 36.7%, 조기 전환 39.4%로 사실상 둘 사이 차이가 없었다. 진보가 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1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견²⁷ (%)

	비율
조건 충족시에만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	42.5
조건과 관계없이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야 한다	27.2
전작권 전환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7.9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면서 1년 넘게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렀다. 인상폭을 두고 이례적으로 1년 이상 공전하던 협정은 2021년 3월, 타결됐다. 본원의 방위비분담금 조사는 협상이 헛바퀴를 돌며 한미 간 이견이 지속되던 시점(2012년 12월)에 이뤄졌다. 당시 41.1%가 방위비분담금을 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2019년 45.6%에서 소폭 하락했지만, 다수가 동결을 지지했다. 반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미국의 요구보다 낮게 인상'(a) 23.1%, '미국의 요구대로 인상'(b) 2.9%였다. 둘을 합해도(a+b= 26%) 동결해야 한다는 비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23.4%로 2019~2020년 사이 6%p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기존보다 13.9% 인상하는 다년 계약(2020년: 1조1천833억원, 2025년까지 4년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함)에 합의하며 미국의 요구보다 낮게 인상한 셈이 됐다. 2020년 조사 시점에는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분담금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소폭 상승했다. 이는 2019년 '미국의 요구보다 낮게 인상해야 한다'에서 일부가 2020년, '현재보다 인하해야 한다'로 의견을 바꿨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7. 출처: 아산연례조사(2020년).

표 11. 한미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의견²⁸ (%)

응답	2019	2020
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	45.6	41.1
미국의 요구보다 낮게 인상해야 한다 (a)	29.9	23.1
현재보다 인하해야 한다	17.2	23.4
미국의 요구대로 인상해야 한다 (b)	3.0	2.9
모름/무응답	4.3	9.6

2.2.3 한국인의 대미 인식

한국인은 미국에 우호적 시각을 보였고, 한미동맹에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에는 위협 요소가 없을까? 트럼프 행정부에선 자국 중심 정책기조가 강화되면서 양국 간 불평등 요인이 한때 동맹을 위협하기도 했다. 앞서 살펴본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타결 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으로 양국 간에는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앞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우호 시각이 미국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케 한다. 실제 미국이 동맹을 통해 안보를 담보하고,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발전, 민주화, 남북 화해·협력,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에선 앞서 밝혀진 대미 인식과 일관된 결과가 나왔다. ‘미국이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의 장애물이었다’, ‘미국이 남북 화해·협력의 장애물이다’는 진술문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각각 64.7%, 56.8%로 다수를 차지했다. 동의하는 비율은 순서대로 35.3%, 43.2%로 그에 미치지 못했다.²⁹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발전이 가능했다는 진술문에는 가장 높은 76.3%가 동의했다.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같다’는 진술문에는 절반이 넘는 55.5%가 동의했다. 이에 동의하

28. 출처: 아산연례조사(2020년), 아산폴(2019년).

29. 미국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일치한 결과에도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는 뚜렷했다. 즉 ‘미국은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에 장애물이었다’는 데에 동의한 응답은 진보 47.7%, 보수 21.2%였고, ‘미국이 남북 화해·협력의 장애물이다’에 동의한 비율은 진보 56.7%, 보수 25.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 않는 응답은 44.5%였다. 남북분단에 있어서도 한국인의 대미 인식은 엇갈렸다. ‘분단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진술문에 ‘동의한다’ 59%, ‘동의하지 않는다’ 41%였다. 다수가 한반도가 미소 냉전의 대결무대가 되면서 남북으로 나뉘었다고 봤다. 이는 이념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진보는 71%가 동의한 반면, 보수는 42.7%만 동의했다(중도: 동의함 57.4%, 동의 안 함 42.6%).

표 12. 한국인의 대미 인식³⁰ (%)

진술문	동의함	동의 안 함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발전이 가능했다	76.3	23.7
미국은 남·북한 화해·협력의 장애물이다	43.2	56.8
미국은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의 장애물이었다	35.3	64.7
한국과 미국은 이해관계가 같다	55.5	44.5
분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59.0	41.0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동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으로 흔들렸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제 모습을 되찾고 있다. 바이든 당선 후 실시된 이번 조사(2020년 12월)에서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높은 신뢰를 보였다. 이는 과거 미국, 한미관계 인식에서 드러난 경향이 2020년 조사에서도 재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정치, 경제,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을 보는 한국인의 시각이 이념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2.3 지역안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안보 요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미중(美中) 경쟁의 심화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지역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부상하면서 미국은 정파와 관계없이 대(對)중국 봉쇄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안보동맹 파트너인 미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미중 대결구도에서 특정 입장을 택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30. 출처: 아산연례조사(2020년).

한국인은 파트너로 중국보다 미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미 비핵화 대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북한을 안보위협으로 본 한국인은 55.8%로 절반을 넘었다. 오랜 기간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무기 개발을 목격해 온 한국인이 북한을 1순위 위협으로 꼽은 것은 당연하다. 북한을 제외하면 중국을 꼽은 비율이 25.9%, 일본 11.3%, 미국 6.1%의 순이었다. ‘통일 후’를 가정해 물었을 때, 한국인은 중국을 최대 안보위협으로 간주했다.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본 시각은 현재에 비해 40.8%p나 늘어 66.7%가 됐다. 미국, 러시아가 통일 후 안보위협이 될 것이란 전망은 각각 8.1%, 1.5%로 별차이가 없었다.

‘현재’, ‘통일 후’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본 한국인은 10명 중 각각 약 3명, 7명꼴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을 안보위협으로 본 한국인은 1명에 불과했다. 앞서 미국, 한미동맹에 높은 신뢰를 보였던 한국인이 미국을 안보 파트너로 간주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중국에는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을 안보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경제 의존도와 별개로 안보 측면에선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는 ‘통일 후’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안보위협이 될 것이란 답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표 13.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³¹⁾ (%)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현재 (a)	55.8	25.9	11.3	6.1	0.4
통일 후 (b)	-	66.7	23.1	8.1	1.5
차이 (b-a)	-	40.8	11.8	2.0	1.1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점과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 외에도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등이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³²⁾ 주변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을 물었을 때에도 한국인은 66.3%가 중국

이 부정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일본(71.5%), 북한(68.9%)의 부정 영향에 비해 낮았지만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반대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3.6%로 다수였다(부정: 17.6%).

일본의 위협, 영향력 인식에는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안보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역사, 영토문제 등으로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법원에서 내려진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보상 판결과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하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한 결정 등도 이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일관계와 같은 복잡한 사안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일관적 외교전략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양국 간 민간교류도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일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일 공조가 강조되고 있지만,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이 인식은 2020년 조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71.5%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긍정: 12.5%). 이는 앞서 ‘현재’, ‘통일 후’ 안보위협으로 꼽힌 북한, 중국보다 더 높았다. 부정 편향된 한국인의 대일(對日) 인식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일본의 영향에 대한 부정 인식은 안보 차원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실제 일본을 안보위협으로 본 한국인은 현재 11.3%, 통일 후 23.1%였다. ‘통일 후’를 가정한 상황에서 일본을 안보위협으로 본 비율이 11.8%p 늘었지만, 최대 안보위협으로 꼽힌 북한과 중국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한국인의 대일 인식은 국가 정체성과 더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를 준다. 첫째, 정부는 격화되고 있는 미중 경쟁 속에서 국내 여론이 중국보다 미국에 호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여론과 괴리된 전략적 선택이 불러올 정치적 대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한일관계로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정책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한일 정치권에서 국내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록 관계 개선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 양국은 현실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관계 복원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31. 출처: 아산연례조사(2020년).

32. Odd Arne Westad, 2021, *Empire and Righteous Nation: 600 Years of China-Korea Relation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표 14. 우리나라에 미치는 주변국의 영향³³ (%)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긍정 (a)	63.6	12.5	11.9	15.5	11.7
중립	18.8	16.0	19.2	18.2	32.9
부정 (b)	17.6	71.5	68.9	66.3	55.4
차이 (a-b)	46.0	-59.0	-57.0	-50.8	-43.7

2.4 글로벌 안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2021년,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는 장기화되고 있다. ‘비전통 안보’ 이슈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인구, 자원, 경제, 안보, 거버넌스 등 광범위한 영역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팬데믹과 같은 ‘비전통 안보위협’은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초국가적 위협이다. 이 측면에서 중견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020년 조사에선 한국인이 기후변화, 환경오염, 테러, 공중보건, 사이버안보, 사회갈등, 자연재해 등을 얼마나 큰 위협으로 보는지 물었다.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비전통 안보위협 가운데 감염병 유행을 위협적으로 본 비율은 95.4%나 됐다. 사스(2003), 신종플루(2009), 에볼라 바이러스(2014), 메르스(2015)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한 전염병은 있었지만, 전 세계에 걸쳐 감염병이 유행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큰 위협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쓰레기 문제 등 환경오염, 기후변화가 위협적이란 응답이 각각 93.7%, 90.3%로 높았다. 사이버 공격을 위협으로 본 비율은 89.2%였다.

인적재난(84.3%), 사회갈등(84%), 자연재해(82.4%), 자원위기(80.5%)를 위협적이라고 한 비율은 80% 내외였다. 10명 중 약 8명 이상이 위협적이라고 한 결과만 놓고 보면, 이들을 큰 위협으로 본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감염병 유행, 또 이와 관련된 환경오염,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 인식이 높았던 탓에 다른 요인에 대한 위협 인식이 다소 낮

33. 출처: 아산연례조사(2020년).

게 보이는 면도 있다. 다음으로 해양안보, 테러를 위협적이라고 한 응답은 각각 76.7%, 65.7%이었다.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적어 위협으로 본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정부 입장에서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현 정부는 감염병,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에 있어 인도적 지원, 나아가 북한과의 공동 대응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물론 북한이 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또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관여(대화, 협상)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고 싶은 정부가 적절한 방안을 찾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표 15.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 요인³⁴ (%)

요인	위험적이다	위험적이지 않다
감염병 유행(에볼라, 코로나19 등)	95.4	4.6
환경오염(미세먼지, 쓰레기 문제 등)	93.7	6.3
기후변화	90.3	9.7
사이버 공격(해킹, 사이버전 등)	89.2	10.8
안전 인적재난(부실공사, 안전불감증 등)	84.3	15.7
사회갈등(세대, 빈부, 지역 등)	84.0	16.0
자연재해(지진, 해일, 화산폭발 등)	82.4	17.6
자원위기(에너지, 식량부족 등)	80.5	19.5
해양안보(불법조업, 해양범죄 등)	76.7	23.3
테러(시설, 대인 및 생화학 테러 등)	65.7	34.3

34. 출처: 아산연례조사(2020년).

3. 나가며

본원의 2010~2020년 연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은 안정적인 편이었다.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국인은 미국을 우호적으로 봤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미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겼다. 이 경향이 거래적 동맹관으로 한미동맹을 경시했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지속됐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동맹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고 봤지만, 한국인은 ‘통일 후’를 가정했을 때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비해,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이는 중국의 부상을 실질적 위협으로 봤기 때문이었다. ‘통일 후’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꼽은 한국인은 다수를 차지했다.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대중 인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에 역사, 사드 배치 등을 둘러싼 갈등과 중국의 북핵문제 대응 등이 한국인의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변국인 일본,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일본에 대해선 역사, 영토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국관계가 부정 인식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을 안보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즉 복잡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양국 간 갈등을 조장하면서 대일(對日) 정서를 악화시켰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인의 대북(對北) 인식은 주로 안보 차원에 머물렀다. 고도화되고 있는 핵 위협으로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짙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 나아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이념성향)에 따라 다른 의견을 보였다는 것이다. 남성, 20대, 60세 이상, 보수에 비해 여성, 30~50대, 진보는 강경책보다 남북 경제협력 강화 등 유화책을 선호했다.

예외적으로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은 북미·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쳤던 2018년을 전후로 차이를 보였다. 당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한국인의 대북·통일 인식이 크게 호전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제고됐던 대북 여론은 평화 무드가 조성되기 전으로 회귀했다. 앞에

서 살펴본 대로 북한 비핵화 전망, 남북관계 인식 등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긍정 인식은 2019년, 2020년 다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위의 결과는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이 여러 이슈에 대한 복잡한 이해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여론을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입장에선 정책을 추진할 때 여론을 무시할 순 없다. 여론의 지지가 담보된 정책은 그만큼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은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 주는 함의가 크다. 물론 외교정책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 대북 인식 등 주요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대선 후보의 입장이 유권자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조사방법

아산연례조사 조사개요

2010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19\%$ 포인트
 조사방법: 개별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0년 8월 16일~9월 1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1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19\%$ 포인트
 조사방법: MMS(Mixed-Mode Survey)- 전화면접조사,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11년 8월 26일~10월 4일
 실사기관: 엠브레인

2012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2년 9월 24일~11월 1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3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3년 9월 4일~2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4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4년 9월 1일~1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5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5년 9월 2일~30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6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6년 9월 9일~10월 14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7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8\%$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7년 10월 19일~11월 14일
 실사기관: 칸타퍼블릭

2018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8\%$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8년 11월 8일~12월 5일
 실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2019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8%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9년 12월 4일~24일
 실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2020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3%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0년 12월 3일~17일
 실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

아산폴 조사개요

2013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 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2013년 2월 13일~15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9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 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2019년 1월 7일~9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부록 1

그림 1. 2003~2020년 남북 인적교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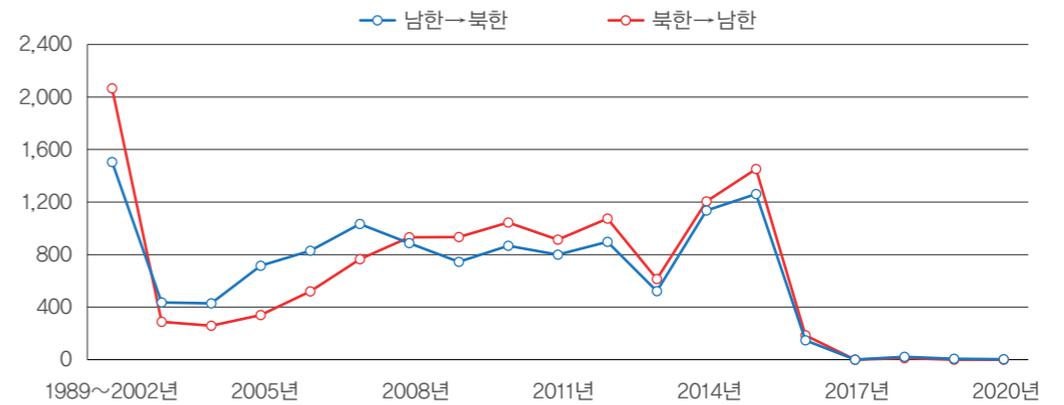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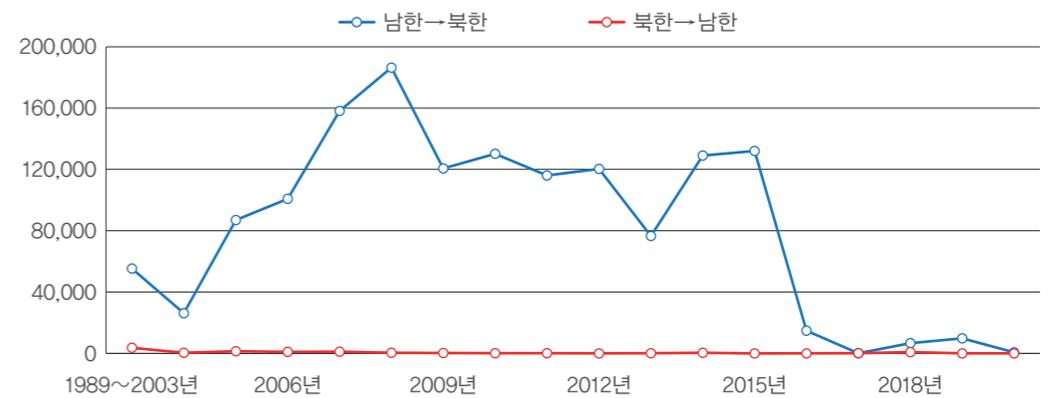


그림 2. 1989~2020년 남북 교역량³⁵ (백만달러, USD)



35. 출처: 통일부.

부록 2: 2010~2020년 남북관계 일지³⁶

2010년

- 1월 27일 NLL 해상 포사격 실시
- 1월 28일 NLL 해상 포사격 실시
- 1월 29일 NLL 해상 포사격 실시
-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 5월 15일 북한 함정, 천안함 사태 이후 첫 NLL 침범, 경고사격에 북상
- 6월 9일 대북 심리전 방송 확성기 설치 완료
- 8월 8일 북한, '55 대승호' 나포
- 8월 9일 북한, 서해상 NLL 남쪽으로 포사격 실시
- 10월 29일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
- 10월 30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10월 30일~11월 2일)
- 11월 3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11월 3~5일)
- 11월 23일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 12월 27일 국방부, '북한정권·북한군'으로 명기

2011년

- 4월 12일 북한, 남측 농협 전산망 해킹
- 8월 10일 북한,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포사격-우리군 대응 사격
-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 12월 19일 북한, 오전 함경남도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시험 발사
- 12월 2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결식 개최

2012년

- 1월 11일 북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
- 1월 21일 유엔 대북제재위, '사치품 금지기준' 발표
- 3월 22일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 4월 13일 북한, 광명성 3호 발사, 궤도진입 실패

- 9월 21일 북한 어선, 여섯 차례 NLL 월선 (9월 12, 14, 15, 20, 21~22일)
- 9월 27일 북한, 평안남도 서해안에서 지대함 단거리미사일 1발 시험발사
- 12월 1일 북한, '광명성 3호-2호기 위성 12. 1. ~ 22. 발사' 발표
- 12월 12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발사

2013년

- 1월 22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087호 채택
- 2월 12일 북한, 제3차 핵실험 실시 (풍계리)
- 3월 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094호 채택
- 3월 15일 북한, 단거리 미사일 두발 동해서 시험발사
- 3월 27일 북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단장, 남북 군통신 단절 및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 통신연락소 북측 인원 활동 중지 통보
- 4월 8일 북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담당비서, '개성공업지구사태와 관련한 중대조치를 취함에 대하여' 담화 발표 (개성공업지구 종업원 전부 철수, 개성공업 지구사업 잠정중단, 존폐여부 검토)
- 5월 18일 북한, 동해안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 (5월 18~20일)
- 12월 12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장성택 북한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행위)에 따라 사형 판결 및 즉시 집행

2014년

- 2월 20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2월 20~25일, 금강산)
- 2월 21일 북한, 동해로 신형 방사포 4발 발사
- 2월 24일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 2월 27일 북한, 탄도 미사일 4발 발사
- 3월 3일 북한, 동해로 SCUD 계열 미사일(추정) 2발 발사
- 3월 4일 북한, 동해로 신형 방사포 7발 발사
- 3월 16일 북한, 동해로 Frog 로켓 25발 발사
- 3월 22일 북한, 동해로 Frog 로켓 30발 발사
- 3월 23일 북한, 동해로 Frog 로켓 16발 발사
- 3월 26일 북한, 동해로 노동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 3월 31일 북한, 서해 해상 사격훈련 계획 통보 및 사격-우리군 대응사격
- 5월 20일 북한, 경비정·단속정 서해 NLL 침범

36.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2010~2020). 부록의 '남북 군사관계 일지'를 참고해 재구성함.

5월 22일 북한, 서해상 우리 측 함정에 포격도발
 6월 26일 북한, 동해로 신형 방사포 3발 발사
 6월 29일 북한, 동해로 SCUD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7월 2일 북한, 동해로 신형 방사포 2발 발사
 7월 9일 북한, 동해로 SCUD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7월 13일 북한, 동해로 SCUD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7월 14일 북한, 고성 MDL 인근에서 방사포 및 해안포 150여 발 발사
 7월 26일 북한, 동해로 SCUD 계열 미사일 1발 발사
 7월 30일 북한, 동해로 신형 방사포 4발 발사
 8월 12일 북한, 어선 1척 서해 NLL 침범
 8월 14일 북한, 동해로 신형 단거리미사일 5발 발사
 9월 1일 북한, 자강도에서 단거리 발사체 1발 동해상으로 발사
 9월 6일 북한, 원산에서 단거리 발사체 3발 동해상으로 발사
 9월 19일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11월 10일 북한, 판문점 부근 군사분계선에 접근, 우리 군의 경고사격 후 퇴각
 12월 5일 북한, 경비정 1척, 연평도 서쪽 NLL 침범

2015년

2월 6일 북한, 동해에서 함대함 미사일 4발 발사
 2월 8일 북한, 동해에서 단거리 미사일 5발 발사
 3월 2일 북한, 서해 남포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3월 12일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지대공미사일 7발 발사
 4월 3일 북한, 서해에서 남쪽으로 단거리 미사일 4발 발사
 4월 7일 북한, 평남 평원군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5월 9일 조선중앙통신, 'SLBM 시험발사 완전 성공' 보도
 북한, 동해에서 함대함 미사일 3발 발사
 5월 14일 북한, 연평도 부근 함포 및 해안포 사격훈련
 6월 14일 북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6월 30일 북한, 단속정 1척 서해 NLL 침범-우리군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
 7월 11일 북한군, 중부전선 MDL 침범-우리군 경고사격
 8월 4일 북한, DMZ 지뢰도발 사건 발생
 8월 20일 북한, 연천지역 우리 측 대북확성기를 향해 포격 도발-우리군 대응사격

10월 10일 북한, 당 설립 70주년 열병식
 10월 20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10월 20~22일, 금강산)
 10월 2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10월 24~26일, 금강산)
 11월 28일 북한, 동해에서 SLBM 발사 시험
 12월 18일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결의안' 채택

2016년

1월 6일 북한, 제4차 핵실험 실시
 2월 7일 북한,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 발사, '광명성 4호 성공적 발사' 특별 중대 보도
 2월 8일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우리군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
 3월 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270호 채택
 3월 3일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미사일 6발 발사
 3월 10일 북한, 황해남도 삭간물 일대에서 원산 동북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3월 18일 북한, 평남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3월 21일 북한, 함경남도 함흥 남쪽에서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5발 발사
 3월 29일 북한,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양강도 방향 내륙으로 단거리 발사체 1발 발사
 3월 31일 북한, 군사분계선 북방에서 GPS 교란 전파 최대 출력 발사
 4월 1일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3발 발사
 4월 15일 북한, 동해로 무수단미사일(추정) 1발 발사
 4월 23일 북한, 신포 앞바다에서 SLBM 시험발사
 4월 28일 북한,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미사일(추정) 2발 발사
 5월 27일 북한, 단속정 및 어선 각각 1척 서해 NLL 침범-우리군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
 5월 31일 북한,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미사일(추정) 1발 발사
 6월 22일 북한,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미사일(추정) 2발 발사
 6월 23일 조선중앙통신, 중장거리 전략탄도탄로켓(화성-10) 시험발사 성공 보도
 7월 8일 한·미, THAAD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 공식 발표
 7월 9일 북한,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SLBM 1발 발사
 8월 3일 북한, 황해남도 은율 일대에서 동해로 노동미사일(추정) 2발 발사
 8월 24일 북한, 신포 앞바다에서 SLBM 1발 발사
 9월 5일 북한, 황해북도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 발사

9월 9일 북한, 제5차 핵실험 실시
 10월 15일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미사일(추정) 1발 발사
 10월 20일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미사일(추정) 1발 발사
 11월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321호 채택

2017년

2월 12일 북한,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2월 13일 김정남 피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3월 6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4발 발사
 4월 5일 북한,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4월 15일 북한,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 진행
 4월 16일 북한,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4월 29일 북한,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5월 14일 북한,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5월 21일 북한,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5월 29일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6월 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356호 채택
 6월 8일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4발 발사
 7월 4일 북한,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7월 28일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CBM급 미사일 1발 발사
 8월 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 채택
 8월 26일 북한,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
 8월 29일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9월 3일 북한, 제6차 핵실험 실시 (풍계리)
 9월 1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5호 채택
 9월 15일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11월 29일 북한, 평남 평성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12월 2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397호 채택

2018년

2월 8일 북한, 인민군 창건일 70주년 열병식 진행

2월 9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 서해 직항로 방남 (2월 9~11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2월 25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 경의선 육로 방남 (2월 25~27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3월 5일 대통령 대북특별사절단 서해 직항로 평양 방문 (3월 5~6일)
 4월 23일 남북, 확산기 방송 중단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판문점), '판문점선언' 채택
 5월 1일 남북, 확산기 시설 철거 개시
 5월 26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통일각)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싱가포르)
 8월 20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8월 20~26일, 금강산)
 9월 9일 북한, 정권 설립 70주년 기념 열병식 진행
 9월 18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양),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
 10월 12일 남북군사실무접촉 개최 (판문점)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평화의 집)
 10월 20일 남북, JSA 지뢰 제거 완료
 10월 25일 남북, JSA 초소·인원·화기 철수 완료
 11월 1일 남북, 지·해·공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11월 30일 남북, 상호 10개 GP(보존 1개소 제외)에 대한 시설물 철거 완료

2019년

2월 27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 (베트남 하노이), 비핵화 협상 결렬
 5월 4일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5월 9일 북한,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7월 25일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7월 31일 북한,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8월 2일 북한,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미상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
 8월 6일 북한, 황해남도 과일군 인근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추정) 2발 발사
 8월 10일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추정) 2발 발사
 8월 16일 북한,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8월 24일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9월 10일 북한,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미사일 2회 발사
 10월 2일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미상 발사체 1발 발사
 10월 31일 북한,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

11월 28일 북한,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2020년

3월 2일 북한,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 방향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

3월 9일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3발 발사

3월 21일 북한,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

3월 29일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 발사

4월 14일 북한,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5월 3일 북한, 우리 측 GP에 총탄 발사-우리군 대응사격

6월 16일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파괴

9월 22일 북한,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발생

부록 3: 2020년 아산연례조사 설문지

문1. 귀하께서는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전혀 관심이 없다	3.1
별로 관심이 없다	20.0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59.3
매우 관심이 있다.	17.6

문2. 만약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남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남한식 흡수통일 방식)	45.9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 (연방제통일 방식)	52.1
북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북한식 흡수통일 방식)	0.1
기타	1.9

문3. 귀하께서는 남북통일의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10.9
여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 추진해야 한다	53.5
통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25.5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10.1

문4. 만약 통일이 된다면 본인의 경제 상황이 현재에 비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매우 나빠질 것이다	9.0
다소 나빠질 것이다	54.0
다소 좋아질 것이다	33.0
매우 좋아질 것이다	4.0

문5. 만약 통일이 된다면 국가의 경제 상황이 현재에 비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매우 나빠질 것이다	15.1
다소 나빠질 것이다	47.7
다소 좋아질 것이다	28.9
매우 좋아질 것이다	8.3

문6. 만약 통일로 인해 본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경제적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5.1
경제적 희생이 크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47.7
통일할 필요가 없다	8.3

문7. 만약 통일로 인해 국가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경제적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5.1
경제적 희생이 크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47.7
통일할 필요가 없다	8.3

문8. 2019년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금은 1,014만 1,000원이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와 별개로 통일을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1년에 얼마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까?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없으면 0을 기입해 주십시오.) (n=1,500)

응답	비율 (%)
부담할 의향이 없다	45.5
1만원 이하	15.4
1만원 초과~10만원 이하	16.7
1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8.1
50만원 초과	14.3

문9. 만약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기대되는 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기대되는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n=1,500)

응답	비율 (%)
전쟁 위험성 해소	34.4
북한의 자연자원 활용	16.8
남한 기술력과 북한노동력의 결합	14.1
대한민국 영토 확장	11.9
이산가족 고통해소	9.5
국제 외교력 신장	8.1
민족의 동질성 회복	4.5
기타	0.7

문10. 만약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우려되는 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려되는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n=1,500)

응답	비율 (%)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29.3
이념 등 가치관의 혼란	21.2
남북 간 빈부격차	13.5
남북 간 생활/문화차이	13.3
정치적 혼란	12.3
범죄 및 치안문제	6.9
남북한 군사분야 통합문제	3.3
기타	0.3

문11. 귀하께서는 평소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 보기 중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n=1,500)

응답	비율 (%)
우리	21.1
이웃	27.9
남	11.5
적	25.7

문12. 귀하께서는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0.7
별로 그렇지 않다	4.4
대체로 그렇다	49.1
매우 그렇다	45.9

문13. 귀하께서는 북한 인권문제가 남북관계에서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3.0
별로 그렇지 않다	18.7
대체로 그렇다	53.1
매우 그렇다	25.2

문14. 귀하께서는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매우 나쁘다	14.7
대체로 나쁘다	69.3
대체로 좋다	15.7
매우 좋다	0.3

문15.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현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책임이 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1,261)

응답	비율 (%)
북한	66.3
미국	14.4
중국	13.1
한국	6.3

문16. 귀하께서는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	78.7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경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21.3

문17. 귀하께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전혀 가능성이 없다	7.0
별로 가능성이 없다	50.3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40.7
매우 가능성이 높다	2.1

문18. 귀하께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n=859)

응답	비율 (%)
미국의 개입에 대한 북한의 우려 때문에	39.7
전쟁을 치르기에는 북한의 경제력이 취약하므로	36.4
전쟁 발발 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7.6
북한이 민족 간의 전쟁을 피하려고 할 것이므로	7.5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4.3
기타	4.5

문19. 귀하께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n=641)

응답	비율 (%)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해서	55.9
미국 등 강대국의 외교, 경제, 군사적 압박 때문에	21.7
북한이 무력통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17.0
현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5.1
기타	0.3

문20. 귀하께서는 남북한 간 전쟁 발발 시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19.3
별로 그렇지 않다	47.7
대체로 그렇다	25.3
매우 그렇다	7.7

문21. 귀하께서는 한국군이 미군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21.4
별로 그렇지 않다	50.9
대체로 그렇다	22.1
매우 그렇다	5.6

문22. 귀하께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보유하고 있다	94.9
보유하고 있지 않다	5.1

문23.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n=1,423)

응답	비율 (%)
매우 낮다	53.3
다소 낮다	40.1
다소 높다	4.6
매우 높다	2.1

문24. 귀하께서는 남북한 간 전쟁 발발 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매우 낮다	12.0
다소 낮다	35.1
다소 높다	34.1
매우 높다	18.9

문25. 다음 중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을 해야 한다	6.3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을 해야 한다	29.0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42.7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야 한다	22.0

문26. 만약 북한이 핵 공격 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7.3
별로 그렇지 않다	41.6
대체로 그렇다	40.4
매우 그렇다	10.7

문27. 귀하께서는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매우 반대한다	7.9
대체로 반대한다	22.8
대체로 찬성한다	42.6
매우 찬성한다	26.7

문28.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n=460)

응답	비율 (%)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43.5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핵무장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26.3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므로	14.8
미국의 핵우산 보장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7.2
기타	8.3

문29.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n=1,040)

응답	비율 (%)
주권국가로서 핵 주권 확립이 필요함으로	33.7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33.4
북핵 위협에 맞대응해야 하므로	32.1
기타	0.9

문30.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매우 반대한다	6.0
대체로 반대한다	19.0
대체로 찬성한다	42.3
매우 찬성한다	18.9

문3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주변국의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를 '0'으로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를 '10'으로 했을 때 0에서 10 사이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n=1,500)

비율 (%)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긍정	11.9	15.5	12.5	63.6	11.7
중립	19.2	18.2	16.0	18.8	32.9
부정	68.9	66.3	71.5	17.6	55.4

문32.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북한	55.8
중국	25.9
일본	11.3
미국	6.1
러시아	0.4

문33. 귀하께서는 통일 이후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될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중국	66.7
일본	23.1
미국	8.1
러시아	1.5

문34. 귀하께서는 한·미 동맹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전혀 필요하지 않다	0.9
별로 필요하지 않다	3.3
어느 정도 필요하다	59.5
매우 필요하다	36.3

문35. 귀하께서는 한·미 동맹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n=1,500)

응답	비율 (%)
전혀 필요하지 않다	2.3
별로 필요하지 않다	11.4
어느 정도 필요하다	60.3
매우 필요하다	26.1

문36. 귀하께서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주둔하지 말아야 한다	28.0
주둔해야 한다	72.0

문37. 현재 주한미군의 숫자는 2만 8,5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향후 주한미군의 규모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n=1,080)

응답	비율 (%)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23.8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60.0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	10.4

문38. 귀하께서는 미군이 통일 이후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주둔하지 말아야 한다	53.7
주둔해야 한다	46.3

문39.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즉 특정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전작권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조건 충족시에만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	42.5
조건과 관계없이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야 한다	27.2
전작권 전환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7.9
잘 모르겠다	22.4

문40.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국 측의 인상안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	41.1
미국의 요구보다 낮게 인상해야 한다	23.1
현재보다 인하해야 한다	23.4
미국의 요구대로 인상해야 한다	2.9
잘 모르겠다	9.6

문41. 귀하께서는 미국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n=1,500)

문항	동의함 (%)	동의 안 함 (%)
분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59.0	41.0
미국은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의 장애물이었다	35.3	64.7
미국은 남북한 화해·협력의 장애물이다	43.2	56.8
한국과 미국은 이해관계가 같다	55.5	44.5

문42. 귀하께서는 한미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자적 외교정책 추진을 '0', 한미동맹 강화를 '10', 현 수준 유지를 '5'로 했을 때 0에서 10 사이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n=1,500)

응답	비율 (%)
독자적 외교정책 추진(0~4점)	21.7
현 수준 유지(5점)	37.3
한미동맹 강화(6~10점)	41.0

문43.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1년 전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n=1,500)

응답	비율 (%)
매우 나빠졌다	27.7
대체로 나빠졌다	50.1
비슷하다	16.3
대체로 좋아졌다	5.1
매우 좋아졌다	0.7

문44. 귀하의 소득이나 살림살이는 과거 1년 전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n=1,500)

응답	비율 (%)
매우 나빠졌다	16.7
대체로 나빠졌다	41.2
비슷하다	36.6
대체로 좋아졌다	5.1
매우 좋아졌다	0.4

문45. 귀하께서는 대북 제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제재를 해제해선 안된다면 '0',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남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 '10', 중립이면 '5'로 했을 때 0에서 10 사이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n=1,500)

응답	비율 (%)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	56.9
중립	13.6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남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9.5

문46.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를 '0'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를 '10'으로 했을 때, 귀하께서는 신안보위협이 본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0에서 10 사이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n=1,500)

위험 요인	위험적이다 (%)	위험적이지 않다 (%)
감염병 유행(에볼라, 코로나19 등)	95.4	4.6
환경오염(미세먼지, 쓰레기 문제 등)	93.7	6.3
기후변화	90.3	9.7
사이버 공격(해킹, 사이버전 등)	89.2	10.8
안전 인적재난(부실공사, 안전불감증 등)	84.3	15.7
사회분열(세대, 빈부, 지역 등)	84.0	16.0
자연재해(지진, 해일, 화산폭발 등)	82.4	17.6
자원위기(에너지, 식량부족 등)	80.5	19.5
해양안보(불법조업, 해양범죄 등)	76.7	23.3
테러(시설, 대인 및 생화학 테러 등)	65.7	34.3

ASAN
REPORT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
2010~2020년 아산연례조사 결과

발행일 2021년 9월

지은이 제임스 김, 강충구, 함건희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ISBN 979-11-5570-231-4 95340 (PDF)



ISBN 979-11-5570-231-4